

#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10호 | 2024 가을

포커스 I 청일전쟁-논리와 시선

포커스 II 청일전쟁-기술과 질병

편집자의 글 이동욱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0호 기획편집위원 4

<p><b>특별기고</b></p>	<p><b>청일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b> 10 최덕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명예교수</p>
<p><b>포커스 I</b> <b>청일전쟁</b> <b>-논리와 시선</b></p>	<p><b>청일전쟁과 조선인의 휴머니즘: 공존을 위한 힘없는 자들의 포용과 상생 모색</b> 23 조재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p>
	<p><b>미국 신문에 나타난 청일전쟁과 조선</b> 36 김희연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p>
	<p><b>청일전쟁은 국제법상 '적법'했을까?</b> 47 오시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b>'종주권' 문제와 청일전쟁</b> 58 이동욱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p>
	<p><b>청일전쟁 130년, 중국의 역사기억과 기념공간의 변화</b> 72 류자평 산동대학 역사학원 교수</p>
<p><b>포커스 II</b> <b>청일전쟁</b> <b>-기술과 질병</b></p>	<p><b>과학 기술과 근대전쟁: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철도와 전신 이용</b> 87 위신광 산동대학 역사학원 박사후연구원</p>
	<p><b>근대 동아시아 정보전쟁과 암호 해독: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b> 96 최덕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p>
	<p><b>청일전쟁과 역병: 일본 근대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b> 107 가토 마사키 아이치교육대학 교육학부 조교</p>
<p><b>체험! 역사현장</b></p>	<p><b>갑오년의 전쟁과 공동의 역사</b> 117 손장훈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p>

## Contents

	<b>Message from the Planning Editor of Vol.10</b> Lee, Dong-uk	<b>4</b>
<b>Guest Essays</b>	<b>Meaning of the Sino-Japanese War: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War</b>	<b>10</b>
	Choi, Deok-soo	
<b>Focus I</b>	<b>The Sino-Japanese War and Korean Humanism: Seeking a Win-Win Network for Coexistence</b>	<b>23</b>
<b>Logics and Perspectives on the First Sino- Japanese War (1894-1895)</b>	Cho, Jae-gon	
	<b>Korea and the Sino-Japanese War in the American Newspapers</b>	<b>36</b>
	Kim, Hee-yeon	
	<b>Was the Sino-Japanese War ‘Legal’ Under International Law?</b>	<b>47</b>
	Oh, Si Jin	
	<b>The Question of “Suzerainty” as a context for the First Sino-Japanese War</b>	<b>58</b>
	Lee, Dong-uk	
	<b>The Evolution of Historical Memory and Memorial Spaces in China Regarding the First Sino-Japanese War Over the Past 130 Years</b>	<b>72</b>
	Liu, Jiafeng	
<b>Focus II</b>	<b>Science and Technology in Modern Warfare: The Japanese Military’s Utilization of Railways and Telecommunications during the First Sino-Japanese War</b>	<b>87</b>
<b>Technology and Disease in the First Sino- Japanese War (1894-1895)</b>	Wei Chenguang	
	<b>Modern East Asian Intelligence War and Decryption</b>	<b>96</b>
	Choi, Deok-kyoo	
	<b>The Sino-Japanese War and Epidemic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Modern Japanese History</b>	<b>107</b>
	Kato Masaki	
<b>Experiencing Historical Sites</b>	<b>First Sino-Japanese war and Common history in Northeast Asia</b>	<b>117</b>
	Sohn, Jang-hun	

2024년 『동북아역사포커스』 가을호는 청일전쟁 130주년 특집으로 꾸밈습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풍도해전으로 시작되어 1895년 2월 <시모노세키조약>으로 마무리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최초의 근대적인 국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일 양국의 전쟁터가 되어 큰 피해를 겪어야 했던 한국은 청일전쟁 이후 계속된 국권 수호 노력에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서양 열강의 침략과 태평천국운동 등 내란을 딛고 중체서용(中體西用) 모델의 근대화를 추진하며 동아시아 강국의 위상을 회복해 가던 청은 청일전쟁 패배 이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 침탈과 이권 쟁탈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와 이를 발판으로 한 러일전쟁 승리를 통해 한국과 타이완을 식민지로 두고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신흥 제국주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을 틈탄 일본의 산둥반도 자오저우만(膠州灣) 점령과 21개 조 요구,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1945)과 아시아·태평양전쟁(1941~1945)에 이르는 20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흐름은 청일전쟁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청일전쟁의 결과가 중체서용을 추구하는 양무운동식 근대화 모델의 실패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서구화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요컨대, 청일전쟁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호는 모두 열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기고」에서 근대 한일관계사 연구자인 최덕수 교수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친일정권을 수립한 뒤 조선을 강압하여 청군에 대한 공수동

맹을 체결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일본군은 또한 이 공수동맹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동학농민군 진압작전에 적용하였습니다. 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고 농민군을 비인도적으로 대량 학살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청일전쟁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며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했다는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판합니다.

「포커스 I」에서는 청일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논리와 시각을 제공하는 다섯 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조재근 교수 글은 그동안 청일전쟁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일전쟁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을 주제로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청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남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장인환과 안창호처럼 조선의 국세가 약하기 때문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계기로 애국운동에 헌신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과 청이 전쟁 과정에서 벌인 야만적 행위와 대조적으로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의 지역주민과 동학농민군은 타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 인도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김희연 연구사는 청일전쟁을 바라보는 당시 미국인들의 시선을 소개합니다. 미국 언론에 비친 미국 정계와 사회의 조선에 대한 태도와 조선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두 명의 미국인인 테니와 카펜터의 언론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조선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것에 비해 조선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두 사람은 조선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보다 문명화된 일본이 조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문명론적인 시각과 조선을 미국의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제국주의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국제법사 연구자인 오시진 교수는 청일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에 따른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의 파병 및 일본의 조선 행정개혁 요구의 적법성 여부, 청일전쟁이 국제법 적용의 대상인지 등 여러 쟁점을 국제법학자의 시선에서 접근합니다. 아울러 이들 쟁점에 대한 19세기 국제법학의 법리와 논의들이 내포하는 제국주의적 요소, 유럽중심주의 내지는 문명론적 시각을 폭로합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1947년 초안에서 1894년 1월 1일 이후 일본의 영토 팽창을 부정하였다는 저자의 지적은 일본의 한국 병합과 식민통치의 합법성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욱 재단 연구위원은 중국 측에게나 일본 측에게나 청일전쟁 개전의 명분이 되었던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의 역사를 다룹니다.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은 전통적인 조청 조공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국제법에서 한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공국이나 속국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완전한 주권의 보유 여부였습니다. 사실 청도 열강에 조선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를 편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 조선과 타국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조선이 청에 형식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지만 내정과 외교에서 자주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이므로 청이 조선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강조했습니다. 1880년대에 들어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이 주권국가로서 서구 열강과 국교를 수립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도우면서도 한편으로 조선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여 사사건건 조선이 자국의 속방임을 강조하며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공인받고자 한 청의 노력은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던 일본과의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류자평 교수는 중국에서 청일전쟁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이 변화해 온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청일전쟁은 주로 국치(國恥)의 서사로 기억되어 왔으나 동시에 중국인의 각성과 부흥 노력의 시발점으로도 기억됩니다. 또한 청일전쟁 시기와 소위 ‘항미원조전쟁’ 즉 한국전쟁 시기 등 각 시대별로 청일전쟁 역사서사를 통해 부각시키려는 내용이 달라져 왔습니다. 청일전쟁을 기념하는 전시시설의 역사 역시 청일전쟁 서사와 역사 기억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학술적 환경에서 활동하는 중국 학자가 소개하는 현재 중국의 청일전쟁을 활용한 애국주의 교육 현황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커스 II」는 글로벌 히스토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에서 당시 최첨단 기술 문명을 활용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군사사와 의료사 시각에서 접근하는 세 편의 글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신광 연구원은 청일전쟁 시기 일본의 철도와 전신 보급 등 근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과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재단 명예연구위원 최덕규 교수는 보다 거시적인 시야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 전신망을 활용한 암호전문의 전파와 그것을 해독하는 기술의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일전쟁 시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이나 러일전쟁 시기 프랑스가 일본의 암호전문을 해독하여 러시아에 제공하거나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차관 지원을 끊는 등 유라시아 대륙

의 동단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전쟁은 지구 반대편 유럽의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토 마사키 교수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의료사 연구의 맥락 위에서 청일전쟁 시기 감염병의 유행과 일본군 내의 방역과 위생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역사현장」은 손장훈 재단 연구위원이 류궁다오 중국강오전쟁박물관 답사기를 통해 중국이 청일전쟁을 어떻게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청일전쟁을 기념하는 독자적인 전시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우리 시각에서 진행한 청일전쟁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우리 땅에서 벌어진 타자의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던져줍니다.

청일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청과 일본의 쟁탈전이었지만, 거시적인 시야에서 보자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리던 19세기 최강국인 영제국과 부동항을 찾아 동진과 남하를 반복하던 제정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반에 걸친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철도 건설에 착수하자, 일본은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되어 극동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화되기 전에 청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세력 범위에 넣은 뒤 영국의 파트너가 되어 러시아의 남하에 대항하겠다는 전략구상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오랜 부침 끝에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적 국제질서의 모델로서 천하질서와 신조공질서를 제시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대립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

하면서 동아시아는 한·미·일과 중·북·러의 대결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한편, 진영논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애국주의 사상정치교육의 수단으로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청일전쟁을 서술하고 기억하는 방식은 이러한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조선이 전쟁의 피해자였다는 점은 생략되고는 합니다.

강대국의 각축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 시점의 국제질서는 종종 청일전쟁이 일어난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비교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가 단순히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여러 주제를 검토함으로써 이 전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청일전쟁 서사와 기억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우리는 청일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서술해야 할 것인가,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의 역사인식 차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0호 기획편집위원

이동욱

# 청일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덕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 1.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점, 청일전쟁

2024년 올해는 청일전쟁 발발 130주년이 되는 해다. 또한 러일전쟁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제1차 세계대전 1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로 타이완을 획득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올랐고, 이어진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반면 청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동아시아에서 종주국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그로부터 5년 뒤 가중되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저항하던 의화단이 수도 베이징의 외교공관을 포위하자, 열강 8개국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수도 베이징에 들어가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전환점이었다.

청일전쟁에 대한 한중일 역사학계의 연구는

## 특별기고

100주년이었던 1994년 전후 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였던 기관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 발굴과 수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정부기록 이외에도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과 평범한 시민이 겪은 전쟁에 관한 기록 등이 발굴되어 전쟁이 미친 사회사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폭이 넓어졌다.

한중일은 이 전쟁을 각각 ‘청일전쟁(한국)’, ‘갑오중일전쟁(중국)’, ‘일청전쟁(일본)’으로 칭하고 있어 연구 경향의 차이를 역사용어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가 해체되어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질적으로 전환되었고, 국내적으로는 300여 개의 지역으로 분열되었던 일본인이 일본 ‘국민’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쟁 수행 과정이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으로도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청일전쟁 연구를 통해 실패한 패배의 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였다. 다시 말하면 청일전쟁은 중국 사회가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계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중국이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경향이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청일전쟁 발발부터 종전까지 과정을 전면적으로 다루기보다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및 확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의 농민군 진압대책, 동학농민군의 일본 인식과 대응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청일 양국의 전쟁목표이자 전쟁터였던 조선, 그리고 전쟁 당사국이었던 청과 일본, 전쟁이 동아시아 3국에 몰고 온 정치, 사회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다. 1894년 동아시아 3국의 역사는 다양한 국내외 요인과 얽히면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당

“  
청일 양국의 전쟁목표이자 전쟁터였던 조선, 그리고  
전쟁 당사국이었던 청과 일본, 전쟁이 동아시아 3국에  
물고 온 정치, 사회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다.  
”

시 시대상황에 대한 역사연구 및 대중의 인식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층위를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청일전쟁의 패배를 딛고 중국은 세계질서의 중추국으로 등장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이른바 신냉전시대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구도는 흔히 청일·러일전쟁기와 비교되고 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한국의 위상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3국 및 국제사회 관계는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글에서는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기가 되었던 청일전쟁에 대해 전쟁 당사국이었던 일본과 전쟁터이자 전쟁의 목적이었던 조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일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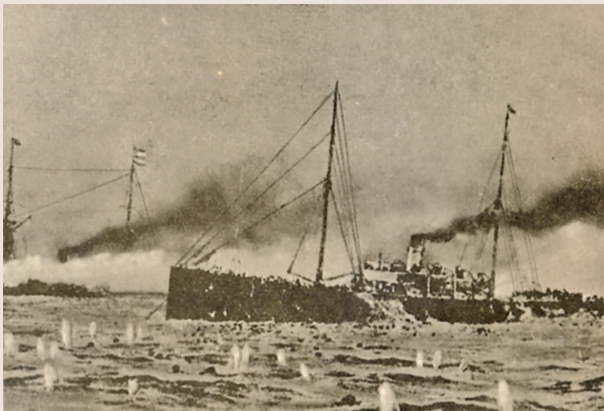
1894년 5월 31일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같은 날 일본 의회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6월 3일 조선은 청에 농민군 진압을 위한 파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일본은 6월

## 특별기고



### 아산대첩도(牙山大捷圖), 왜노점거한경도(倭奴佔踞韓京圖)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조선의 왕궁을 공격하면서 일본군과 조선 수비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 그림에는 두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왼쪽 하단은 경북궁으로 돌진하는 일본군의 모습, 오른쪽은 아산전투의 모습이다.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www.jacar.go.jp](http://www.jacar.go.jp)), 대영도서관 소장



### 침몰하는 고승호

고승호는 청이 동학농민전쟁 진압용 군사수송선으로 사용하려고 임대한 영국 증기선이다. 1894년 7월 25일 병사 1,000여 명과 물품을 싣고 아산만으로 향하던 고승호는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침몰되었다. 이 사건은 청일전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출처: 국가유산청([www.khs.go.kr](http://www.khs.go.kr))

## 특별기고

2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6월 5일 대본영을 설치함으로써 정국을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런 다음, 파견군을 대규모 혼성여단으로 편성하고, 선발부대 약 4,000명을 6월 9일 인천에 상륙시켰다. 그날 청의 병력도 충청도 아산만에 도착하였다. 청일 양군이 출병하자 6월 11일 동학농민군은 정부군과 화약(전주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거류민 보호라는 출병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일본은 15일 청에 조선 내정 공동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농민군의 재봉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의 내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청은 6월 22일 1차, 7월 12일 재차 이를 거부하였다. 청이 공동개혁안을 거부하리라는 것은 일본도 예상하고 있었다. 일본은 6월 22일 청의 거부를 명분으로 삼아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6월 25일 이후에는 러시아와 영국 등 열강도 조선의 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의 파병 통고 이틀 뒤 국내 체제를 재빠르게 전시체제로 전환하였던 일본은 8월 1일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하지만 청일전쟁은 전쟁 당사국이었던 청과 일본이 전쟁에 돌입하기 전, 조선의 수도 한복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894년 7월 23일 새벽 4시 일본군은 서울에 진주하였던 혼성여단 병력을 동원하여 왕궁인 경복궁을 포위하였다. 4시 30분경 영추문을 넘어 경복궁 점령을 무단으로 시도하면서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에 총격이 벌어졌다. 이어서 4시 40분경 광화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는 일본병 1중대와 장위영 병사 300여 명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였다. 결국 오전 7시경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였고 오후 3시 30분경에는 창경궁 흥화문 앞에서 통위영 병력 200여 명과 일본군이 충돌하였다. 이날 경복궁 점령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 간 세 차례에 걸친 전투 후에도 경복궁 북방 북악산으로 후퇴한 조선 병사와 두 차례 교전

## 특별기고

과정에서 조선군은 7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가 통치와 주권의 핵심인 조선 왕궁의 점령을 시도한 것이었다. 8월 1일 일본이 청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하기 전 조선에 대해 명백한 전쟁 행위를 벌인 것이었다.<sup>1</sup> 지금까지 ‘경복궁 점령사건’으로 불려왔던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국가 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조일전쟁, 1차 조선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2</sup>

경복궁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뒤 조선의 개화파 세력을 중심으로 갑오정권을 출범시킨 일본은 효과적인 전쟁 수행과 열강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조선의 동의와 협조가 절실했다. 그래서 일본은 강압적으로 조선과 <잠정합동조관>(7월 22일)과 <조일맹약>(8월 26일)을 체결하였다. <잠정합동조관>은 전문과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의 내정개혁 권고 수용(1조), 경부 및 경인 지역의 철도 부설(2조)과 전신선(3조) 문제, 통상항구 추가 개항(4조), 경복궁 점령 문제(5조), 조일 양국의 내정개혁 협의(6조), 일본군 철수(7조)에 관한 내용이었다.

<잠정합동조관>의 핵심은 전문과 5조에 있다. 전문에서는 “양국 군대의 우연한 충돌사건”이라고 규정하였고, 5조에서는 “피차가 이를 추궁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조선의 자주독립과 내정개혁을 내세우며 경복궁을 무단 점령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침략행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 내정개혁에서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이권을 획득하려 ‘합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했다. 조선 왕궁 점령사건에 대해 일본은 조선 병사가 먼

1 이성환, 2016, 『청일전쟁-근대 동아시아 문제의 기원』, 살림.

2 하라 아키라 저, 김연옥 역, 2015,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  
이는 조선의 자주독립과 내정개혁을 내세우며  
경복궁을 무단 점령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침략행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 내정개혁에서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이권을 획득하려  
‘합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했다.  
”

저 발표하여 양국 군대의 우발적 충돌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응전하면서 왕궁으로 들어가 국왕을 보호한 소규모 충돌사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 3.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

5월 31일 전주성에 들어간 농민군은 6월 9일 청군이 아산만에,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후 해산하였다. 이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친일정권 수립, 그리고 청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집강소를 통해 정국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9월 15일 발발한 평양전투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양호순무영을 설치하였다. 일본군과 관군의 동학군 탄압이 예상되면서 정국을 관망하던 농민군 지도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농민군 2차 봉기의 도화선인 남접의 남원대회(9월)와 삼례재기포(10월)는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에서 편성된 후비보병 독립 19대대가 11월 5일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 시기 동학농민군 탄압에 동원되었던 일본군은 19대대 3개 중대를 비롯하여 후비보병 독립대대 1중대, 용산·인천 수비대 소속 1중대, 부산 수비대 1대대와 보충병 등 초기에 투

## 특별기고

입되었던 수비대까지 포함하면 15개 중대 3,371명이었다.

후비보병 19대대가 인천에 상륙하고 나흘 뒤인 11월 9일 인천병참사령부는 동학농민군 진압부대 지휘관에게 <동학당 진압을 위해 파견대장에게 내리는 훈령>을 내렸다. 진압군은 훈령에 의거, 12일부터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전체 7개 조항으로 된 훈령은 1항에서 각 지역 동학당의 집결 현황을 나열하고 일본공사관이 동학당 진압의 주체임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2항에서는 작전의 주요 내용과 주체에 대해, 4항에서는 작전 진행 시 유의점에 대해, 5항에서는 전쟁 수행 중 조선 지방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것이었다. 사료가 당시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는 생각에서 주요 내용을 인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항.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다음 항에서 지적하는 세 개의 길로 나누어 진격하여 조선군과 협력, 연도에 있는 동학당을 격파하고 그 화군을 초멸함으로써 동학당이 다시 일어나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로 인정되는 자는 체포하여 경성 공사관으로 보내고... 단, 이번 동학당 진압을 위해, 전후로 하여 파견된 조선군 각 부대의 진퇴의 조절은 모두 우리 사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며, 우리 군법을 지키도록 한다. 만일 군법을 위배하는 자가 있으면 군율에 따라 처리하기로 조선 정부로부터 조선군 각 부대장에게 이미 시달되어 있으니, 세 갈래 길로 이미 출발했거나, 또는 장차 출발할 조선군의 진퇴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 사관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야 될 것이다.

4항. 각 길로 나누어 진격하는 중대는 대략 별지와 같은 일정표를 따라야 한다. 동로 분진중대를 조금 먼저 가게 해서 비도를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즉 전라도 방면으로 내몰도록 힘써야 한다. 만일 비도들을 강원도와 함경도 쪽, 즉 러시

## 특별기고

아 국경에 가까운 곳으로 도피하게 하면 적지 않은 후환이 남게 되므로 엄밀히 이를 예방해야 한다.

5항. 각 분진중대에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진무사 및 내무관리 등을 따르게 할 것이다. … 내무관리는 각 중대를 수행, 대장의 명을 받들어 연도 각처에서 식량, 기타 군수품을 조달하고 인부 및 마필의 고용과 숙소 공급 등을 주선하여 각 중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임무로 한다.

6항. 각 중대는 3일분의 식량과 2일분의 휴대 구량 및 취사도구를 휴대해야 한다. … 단, 매일 매일의 식량과 각종 물품은 가능한 한 현지에서 조달하고, 혹시 휴대한 식량과 물품을 모두 소비했을 때는 힘써 빨리 현지 물자를 매입하여 보충해야 한다.

위 진압훈령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 진압의 주체는 주한일본 공사관이며, 작전의 주요 목표는 내부적으로는 동학군과 조선 내 유력 인물, 즉 대원군 세력, 밖으로는 러시아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조선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과 처벌권은 일본군이 가지고 있으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조선 지방관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본군이 농민군에 대한 진압작전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조선 지방관이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전시행동에 대한 명령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었을까. 이것은 앞에서 검토했던 <잠정합동조관> 체결 일주일 뒤에 맺은 <조일양국맹약>에 근거하였다. <조일양국맹약>은 다음과 같은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1조. 청국 병력을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켜 조선국의 자주독립을 공고히 하고 조일 양국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특별기고

2조. 일본은 청국과의 공수전쟁에 임하고, 조선은 일본 군대가 진퇴할 때 양식 등 많은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반드시 편의를 제공함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3조. 이 맹약은 청국과 화약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려 파약한다.

이 조약은 청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양국이 ‘공수상조’한다는 군사동맹이었음에도, 9월 이후 농민군 진압에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 이 조약에 근거해 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은 모두 일본군이 장악해버렸다. 실제로 농민군 진압을 위한 일본군의 작전 수행 시 조선군의 작전권은 모두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일본군과 조선군(양호순무영군)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4.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전쟁이었다

청일전쟁 1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전쟁 초기 양국이 체결하였던 두 조약을 통해 한일 양국 학계의 연구 성과 중 대립하는 관점을 살펴보았다.

청일전쟁 100주년을 전후하여 그리고 13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한중일 3국에서는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각국 간 인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다. 청일전쟁에 대한 일본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최근 간행한 저서에서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전쟁에 말려들었으며, 전쟁의 개전과 수행 과정에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수행한 전쟁이

“

청일전쟁은 단순히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다.  
전쟁의 처음과 끝이 조선을 향하고 있었다. 한반도 전 지역이 전쟁터가 되면서  
최소 3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살상된 동아시아 전쟁이었다.

”

었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청일전쟁 초기 일본이 조선에 강요한 두 조약의 체결 배경과 목적에 따르면, 일본 정부 특히 군부가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였고, 전쟁터였던 조선과 청 영토에서 전시국제법상 비인도적인 대량학살을 감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청일전쟁은 단순히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다. 전쟁의 처음과 끝이 조선을 향하고 있었다. 일본은 1894년 8월 1일 공포한 <대청선전포고>에서 “조선의 자주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전쟁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전쟁을 끝내는 <시모노세키조약> 1조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공언하였다. 청일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를 목적으로 한반도 전 지역이 전쟁터가 되면서 최소 3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살상된 동아시아 전쟁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두 차례의 전쟁(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국가 반열에 올랐던 일본이 감행한 최후의 전쟁(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결과는 원자폭탄이라는 재앙과 패전이었다. 최근 일본 학계의 청일전쟁 연구는 전후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두드러

3 檜山幸夫, 2022~2023, 『日清戦争の研究 上・中・下』, ゆまに書房.

4 조재근,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

청일전쟁이 동아시아 전쟁이었으며 조선이 불법적인 전쟁 피해의 당사자였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역사를 외면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

진다. 이른바 ‘신냉전’을 맞이한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본의 청일전쟁 인식과 연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간 한국에서는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을 청과 일본의 전쟁으로 기술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동아시아 전쟁이었으며 조선이 불법적인 전쟁 피해의 당사자였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역사를 외면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 한국에서도 동학농민전쟁 관련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청일전쟁을 정면으로 다룬 성과가 처음으로 출간되었다.<sup>4</sup> 나아가 학계 차원에서도 동북아역사재단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청일전쟁 130주년인 올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간의 연구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의 청일전쟁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덕수(崔德壽, Choi, Deok-soo)**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근대정치사와 한일관계사를 전공했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 『근대 조선과 세계』(열린책들, 2021),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열린책들, 2010) 등이 있다.

포커스 I

# 청일전쟁 -논리와 시선

---

**청일전쟁과 조선인의 휴머니즘:  
공존을 위한 힘없는 자들의 포용과 상생 모색**  
조재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미국 신문에 나타난 청일전쟁과 조선**  
김희연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청일전쟁은 국제법상 '적법'했을까?**  
오시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주권' 문제와 청일전쟁**  
이동욱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

---

**청일전쟁 130년,  
중국의 역사기억과 기념공간의 변화**  
류자평 산동대학 역사학원 교수

# 청일전쟁과 조선인의 휴머니즘

## 공존을 위한 힘없는 자들의 포용과 상생 모색

조재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1. 전쟁으로 바뀐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

올해는 청일전쟁(1894~1895)이 일어난 지 130년이 되는 해다. 청일전쟁은 한중일 삼국의 운명을 갈라놓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시기 삼국의 접촉점과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달랐다.

청은 전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동양 국가들 내에서의 패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었다. 전쟁에 임해서도 주전론자와 주화론자로 양분되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제당(帝黨)과 후당(后黨) 간에 공격을 일삼았다. 청군은 전쟁 초반 ‘보호속방(保護屬邦)’과 ‘항왜원조(抗倭援朝)’의 입장에서 조선에 대한 ‘상국(上國)’임을 과시하고 막연히 승리를 낙관했다. 그러다 열세에 몰리자 내적 통합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좌고우면하고 구명도생에 급급하여 급기야 방기와 약탈로 방향을 전환했다.

“

일본군은 전승의 환희에 도취한 나머지  
서양에 자랑하던 문명과 규율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투에서 패한 청군과 일반 조선 인민에게 가혹한 참형을 행하기도 했다.

”

‘늙은 대국’ 중국은 이미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으로부터 ‘중화제국’의 회생 기회가 소멸되는 모습이 표면화되고 30년 양무운동의 성과도 청일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다. 결국 전쟁 참패 5년 후 의화단운동을 구실로 서구와 일본 등 8개국 연합군이 수도 베이징을 함락했고, 이는 청 멸망과 그에 따른 내부의 치열한 반성, 민족적 각성과 함께 민국(民國) 성립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신생국’ 일본은 청일전쟁 동안 기동성, 병력 수송, 정보전 등 전략과 전술에서 청을 압도했다. 일본의 제국주의 군사체제와 천황제의 근간은 청일전쟁부터 결정되었다. 그 역사적·인적·공간적 경험은 10년 후 러일전쟁 도발로 이어졌고,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군사적 제국주의의 길을 견지했다. 일본군은 전승의 환희에 도취한 나머지 서양에 자랑하던 문명과 규율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투에서 패한 청군과 일반 조선 인민에게 가혹한 참형(斬刑)을 행하기도 했다. 집단적 대규모 참살과 극단적 국가주의로 점철된 반성 없는 역사는 청일전쟁 동안 랴오둥반도 뤄순대학살의 비극을 초래했다. 1894년 11월 뤄순대학살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일본군은 조선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을 대량으로 학살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타이완에서도 민중을 무차별 살해했다. 무고한 인명 살상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었던 일본의 행동은 그로부터 43년 후인 1937년 12월 난징대학살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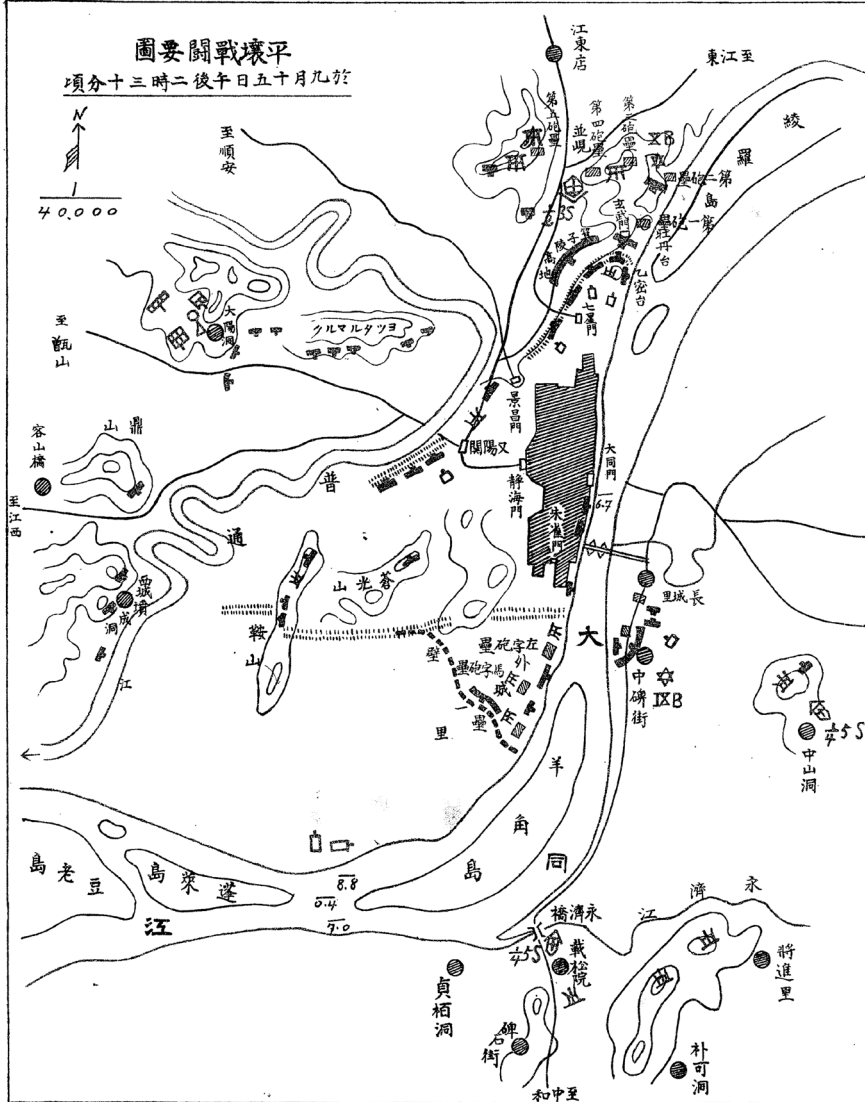
## 포커스 I



### 일본군이 청군을 참수하는 장면

우타가와 구니마사(歌川國政) 그림, 미국 보스턴미술관 및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 소장

동시기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청일전쟁은 분명 ‘남의 전쟁’이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비껴 있던 경상도 문경 지역에서는 출동한 일본군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오늘날의 난리는 과연 별 난리라고 할 만하다. 난리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몸을 팔아 남 대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청일전쟁 주요 전투지역이었던 평양 선교리 출신으로 친일 미국 언론인 스티븐스(Durham Stevens)를 살해한 독립운동가 장인환도 청일전쟁을 직접 체험했다. 그는 청일 양군이 평양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세가 약하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함부로 들어와서 전쟁하는 것이라며, 기울어져 가는 국가의 운명을 바로잡는 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던 평양 인근의 강서 출신 계몽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도 “일본과 청은 싸우려면 자기 나라에서 싸울 것이지



평양전투 당시 평양 일대 주요 지역 및 군사 배치 등이 표기된 일본 지도

『日清戰役 平壤ノ戰闘』에 부록으로 실린 <평양전투요도(平壤戰闘要圖)>,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1934).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www.jacar.go.jp)

“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투 과정에서 호전적 애국주의와  
야만적 행위로 점철된 일본·청과 달리  
아산을 비롯한 내포 일대의 지방관과 주민들은  
따뜻한 인본주의를 보였다.  
”

왜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나?”라고 반문하면서, 청일전쟁을 보고 느낀 순간부터 일생을 ‘애국사업’에 몸 바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당시 한국인들의 기억에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으로 남아 있다.

## 2. 애국주의, 야만적 행위, 인본주의의 실현장이 된 한반도

청일전쟁 당시 아산 지역의 청·일군 진주와 전투로 인한 물자와 지역민 동원, 피해상, 이산(離散), 군대의 징발과 약탈 등과 관련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이 지역에서 전개된 해상전·육상전에서의 패잔병 처리 문제도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투 과정에서 호전적 애국주의(Jingoism)와 야만적 행위(Barbarism)로 점철된 일본·청과 달리 아산을 비롯한 내포 일대의 지방관과 주민들은 따뜻한 인본주의(Humanism)를 보였다. 풍도해전 과정에서 익사 직전에 있거나 표류하던 고승호와 광을호의 청군 생존자를 극진하게 대우하는 ‘유원지의(柔遠之義)’를 실천하고, 성환전투에서 전사한 청군과 일본군 모두를 예장(禮葬)했던 점은 이를 보여준다.

당시 왕궁이 일본군에게 점령된 상태에서도 충청도관찰사는 성환전투에서 전사한 청군과 일본군 모두를 예장 처리하라고 해당 지역의 군수에

## 포커스 I

게 당부한 일이 있었다. 사망한 군인의 해골이 드러나는 불쌍한 상황에 관찰사는 감영의 아전을 보내 읍의 아전 입회 아래 전사자를 조사하고 청군과 일본군을 자세히 살펴 두 무덤으로 나누어 만들어, 혹시라도 섞이는 폐단이 없도록 했다. 또한 각기 무덤 옆에 단을 설치하고 표를 세워 살필 수 있는 근거로 삼고, 그 전말을 책으로 만들어 자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번 싸움이 벌어진 후 다친 군사들의 수효는 반드시 많을 것이다. 해골이 드러나고 있으니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습하여 덮어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영교(營校)를 이곳에 내려보낸다. 읍에서는 또한 장리(將吏)를 정하여 함께 입회토록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묻힌 곳을 살펴서 조사하도록 하라. 중국군과 일본병을 자세히 살펴서 두 무덤으로 나누어 만들어, 혹시라도 섞이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각기 무덤 옆에 단을 설치하고 표를 세워서 살필 수 있는 근거로 삼을 것이며, 무덤에 들어간 것은 사실에 따라 책을 만들어서 보고하라.

『금번집략』, 「직산겸임에게 내림」

성환전투에서 패한 후 후퇴하는 청군에게 공주에서 살해된 프랑스인 신부도 프랑스공사관에서 감동할 정도로 서울로 운구하여 매장하는 데 극진한 예를 갖추었다. 평양으로 퇴각하면서 천안에 맡겨 둔 직예제독(直隸提督) 예즈차오(葉志超)의 군자금도 보관 후 돌려주게 하여 약속과 신의 성실의 관계를 지켰다. 예즈차오는 다급하게 도주하면서 군자금으로 사용할 은전과 옷상자를 천안에 맡겨둔 일이 있었다. 이에 관찰사는 해당 지방관에게 공문을 내려 원래의 수량과 일일이 대조하여 살피고 착실하게 맡아두었다가 나중에 찾아갈 때를 기다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리

## 포커스 I

품을 약탈, 전시하고 일부는 개인에게 분배한 일본 군대나 내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당시 예즈차오가 의뢰한 은은 원보은(元寶銀) 748정(錠)으로, 1정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35냥에 해당하였으니, 총 32만 5,380냥의 거액이었다.

방금 도착한 청국 제독 섭지초(葉志超)가 옮겨 조회한 내용을 요약하면 ‘군대를 퇴각하느라 바쁠 무렵에 한전(韓錢)과 옷상자를 천안에 맡겨둔 것을 거두어 잘 보관하도록 타일러서 이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전의 수효와 옷상자와 나머지 건수는 옮겨 조회한 내용에 의하여 뒤에 기록한다’라고 했다. 이에 베껴 써서 감결을 보내므로, 여기에 적은 건수에 의거하여 일일이 대조하여 살피고 아울러 한전과 더불어 착실하게 맡아서 지키도록 하여 나중에 찾아갈 때를 기다려라. 혹시라도 소홀히 하여 억지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먼저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하여 살피는 데 근거로 삼음이 마땅하다. 『금번집략』, 「천안에 내림」

패잔 청군과 동학농민군의 결합도 주목된다. 실제로 당시 청군 패잔병이 동학농민군에 의탁하는 경우는 정부 측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조선 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의 출동을 애걸했고, 흥선대원군은 평양에 들어온 청의 장수에게 밀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한편 동학농민군은 아산과 성환에 주둔하다가 일본군이 기습하자 논산으로 패퇴한 청군을 일시 수용하여 전주부터 장성까지 동행한 바 있었다. 당시 농민군 지휘부에 있던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 의하면, 청의 패잔병 500명이 논산의 북점 농민군 주력에 들어와 거두어 줄 것을 애원했다 한다. 이때 동학군 진중에서는 조선 정부 측의 청구로 자신들을 박멸하기 위해 온 자들이지만 일본군과 싸워 패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처지를 불쌍히 여겨 ‘내자불거(來者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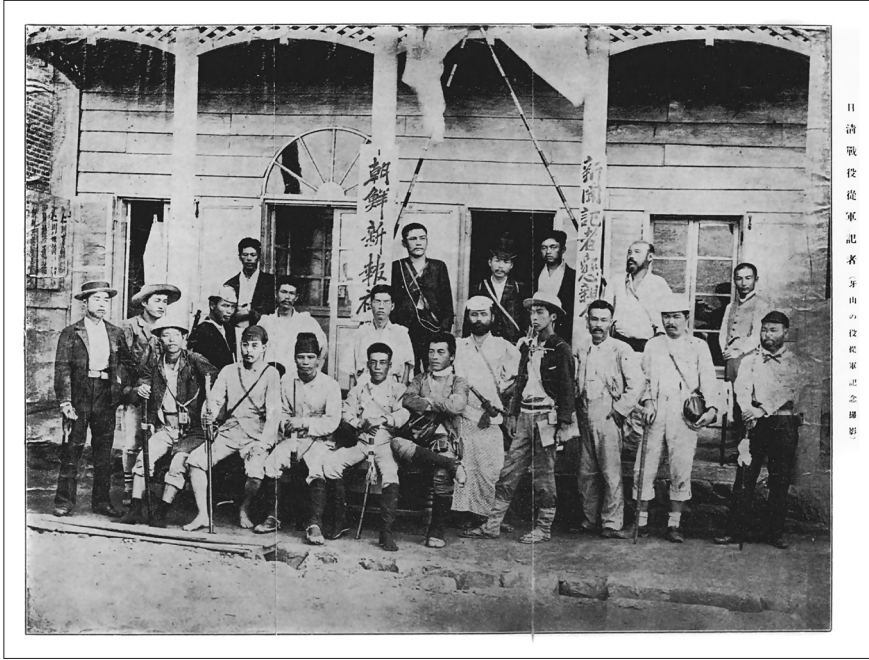


〈일본혼, 영아의 투쟁〉

청일전쟁 당시 군국주의교육은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군국주의자로 성장하였고, 그 결과는 러일전쟁을 거쳐 만주 침공,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표출되었다. 우타가와 구니마사 그림, 대영박물관 소장.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www.jacar.go.jp)

拒)’의 입장에서 이들을 군중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과 일시 합친 패잔 청군 일부는 논산에서 전주까지 같이 가다가 장성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한다. 또한 평양 방면으로 후퇴하던 중 강원도 원주에 도착하자 관리가 부상당한 사졸을 보호하여 병졸이 모두 감읍했다고 총병(總兵) 네스칭(聶士成)이 기록하고 있다. 8월 10일 평안도 중화전투에서 사망하여 청군이 고랑에 유기한 일본인 통역 2명의 유해도 지역주민들이 수습 후 매장했다.

반면, 일본군의 경우 이와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풍도해전에서 고승호가 침몰할 때 일본 해군은 물에 빠진 영국인만 선별 구제하고 청군에게는 총격을 가했으며, 일본 육군은 전투력을 상실한 패잔 청군 및 청



청일전쟁 당시 일본 종군기자들의 기념촬영(1894. 7. 27)

1894년 청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들어온 일본인 종군기자들이 조선신보사(朝鮮新報社)에 모여 간친회 개최 후 기념으로 촬영한 것이다. 사진 설명에는 '아산(牙山)의 역(役) 종군기념 촬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투는 성환에서 전개되어 일본 군대를 따라 모두 성환으로 갔다. 일본전보통신사, 1915, 『신문총람: 일청전쟁 종군 신문기자 간친회』 출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www.ndl.go.jp](http://www.ndl.go.jp))

국민 잔류자를 수색·살해하고, 부상 포로 및 군수품 절도자를 참수하기도 했다. 조선 주재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성환전투 직후 함경도와 강원도 지방관들이 패산한 청 병사들을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어 청으로 보내도록” 지방민들에게 지시 공문을 발행했다는 첩보를 접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 정부에 강경하게 항의하여 공문을 취소시키고 해당 지방관을 징계 처분하도록 촉구했다. 신임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

上鬻)도 일본군을 파견하여 충청도 각 지역에 숨어있던 청국인들을 직접 가서 조사케 하고, 그 소식을 조선 정부에 알리면서 이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지방의 해’가 되고, 한일 양국 간 체결한 ‘동맹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잡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평양전투 이후의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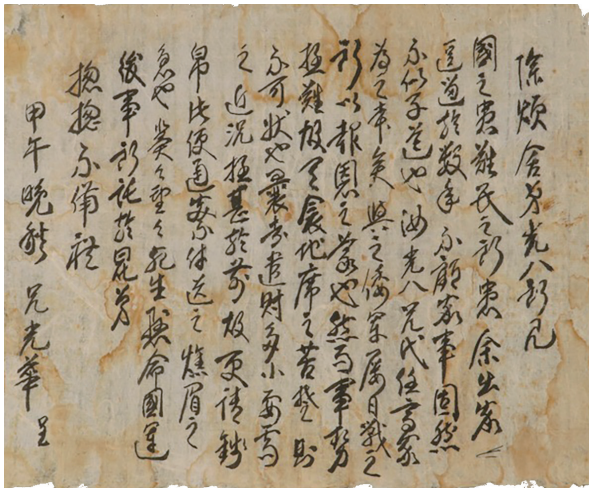
이렇듯 청일전쟁 전 기간에 걸쳐 일본군 지휘관과 병졸은 물론이고 중군 인부와 특과원들까지도 청군과 우리 주민을 무차별 살해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일본인 인부는 자국민에게는 하등 인민으로 차별받던 존재였지만, 조선에 들어온 이후에는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조선인의 재물 약탈과 구타, 부녀자 강간 등 민폐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군부의 묵인 아래 총과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고서 청군과 조선인 살해에 참여하는 등 전투병의 역할도 대행하고 있었다. 한편 중군특과원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보도보다는 언론인의 윤리와 책임을 상실하고 제국주의의 나팔수로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도식을 적용한 인국모멸(隣國侮蔑)의 배외적인 충군 애국주의로 점철했다. 다수의 기자들은 사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눈을 감고 시종일관 허위와 왜곡 보도를 일삼고 이를 본국에 전달하였다. 이들은 군대와 완전한 일체감을 가지고 일본 군국주의의 첨병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3. 배려와 포용의 정신을 실현한 조선인들

청일전쟁 동안 조선인들은 ‘남의 전쟁(客擾)’에 동원, 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항했고 의지와 상관없이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

## 포커스 I

기에 청과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만했다. 충청도 청풍의 한 유생은 전쟁 동안 자신의 무력감을 “이 세상을 당하여 청 사람과 왜놈(倭奴)들은 총을 메고 동도(東徒)는 내란을 일으켜 천하가 어지럽고 인심이 두렵고 불안하여 말 한마디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한 걸음도 감히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에서 관리를 하던 김약제는 농민전쟁을 ‘남요(南擾)’로, 청일전쟁을 ‘왜요(倭擾)’로 규정했다. 그는 갑오년 당시를 “서울은 일본인이 성에 가득하고, 황해도에는 민요(民擾)가 다시 일어나 감사가 잡혀가서 무리들과 함께 죽었다고 했다. 평안도는 청국 군대가 패배하여 도주할 때 저지른 폐단이 비할 데가 없어 읍들이 거의 비게 되었고, 강원도에도 동학이 일어났으며, 경상도에도 동도(東道)의 난리가 일어났다”고 했다. 소요는 함경도만을 제외한 전국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청과 일본의 전투장이 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유원지’를, 동학농민군은 ‘내자불거’의 따뜻한 인도주의를 보였다.



### 동학농민군 유광화의 편지

이 편지는 2022년 문화재청의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때 대표적인 기록물 목록에 포함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장. 출처: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e-donghak.or.kr/archive)

“  
청일전쟁기 조선의 민중들은 이방인들의 폭력으로 강요된  
통제와 동원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에서도  
타자를 대하는 방법에서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

‘유원지의’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한 후 되돌려 보낸다”는 조선의 전통적 손님 접대 방식으로 서양인과 중국인이 조선에 표류할 때마다 실행한 바 있었고, 고종대 초반 흥선대원군 집정기에 평안감사 박규수 등이 실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인도 풍랑으로 부득이 중국에 표류할 수밖에 없었을 때 같은 이유로 돌아올 수 있었다. 즉 유원지의는 동아시아 상생의 네트워크였다. ‘내자불거’는 맹자의 철학을 반영한 “무릇 가는 사람은 붙들지 말고 오는 사람은 누구든 막지 않는다”는 인본주의 원리에 따라 청군의 진압 대상인 동학농민군이 스스로 표명한 ‘상화(相和)’의 방식이었다.

요컨대 청일전쟁기 조선의 민중들은 이방인들의 폭력으로 강요된 통제와 동원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에서도 타자를 대하는 방법에서 열린 태도(open arms)를 견지하고 있었다. 농민군들은 일찍이 동학에서 표명한 양반과 상놈의 차별 없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베풀고 돕는 ‘유무상자(有無相資)’와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서로 보살피는 ‘빈궁상휼(貧窮相恤)’을 기꺼이 실현하고 있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의 서두 외에도 정부군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배우고 실천하는 근본’ 강령으로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배고픈 자는 음식을 준다. 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아픈 자는 약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 동학농민군 접주 유광화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라가

## 포커스 I

환란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라는 결의를 다졌던 그 또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청일전쟁기 조선인이 보여준 공존을 위한 힘없는 자들의 포용, 그것은 같은 기간 전투력을 상실한 패잔 농민군과 청군 잔류자와 상인을 수색·살해·집단처형했던 일본군의 행위와 크게 대비되는 진정한 의미의 휴머니즘이었다.



### 조재곤(趙宰坤, Cho, Jae-gon)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국민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한국근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푸른역사, 2024), 『고종과 대한제국: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형성』(역사공간, 2020), 『전쟁과 인간 그리고 ‘평화’: 러일전쟁과 한국사회』(일조각, 2017), 『해천추범: 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편역, 책과함께, 2007), 『보부상: 근대 격변기의 상인』(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혜안, 2001) 등이 있다.

# 미국 신문에 나타난 청일전쟁과 조선

김희연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1. 가련하고 불쌍한 나라, 조선

1882년 5월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은 ‘거중조정(居中調整, good offices)’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분쟁을 겪거나 침략을 받았을 때 상대방 나라가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듬해(1883) 초대 주한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 1826~1913)가 조약 비준서를 지니고 조선의 수도 한성에 도착했다. 4년 후(1887) 조선 측도 박정양(朴定陽)을 초대 주미조선공사로 파견하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공사관을 설치했다. 7년 후(1894) 청일전쟁이 임박했을 때, 당시 주미조선공사 이승수(李承壽)는 거중조정 조항을 들어 미국의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청일전쟁은 자국과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의 전쟁이었다. 그들에게 조선

“

그레섬 미 국무장관은 주일미국공사를 통해  
약소국 조선을 침략하는 청일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라며  
일본의 전쟁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정신 나간 실책’이라  
혹평하며 그간 정부가 펼쳐온 불개입 정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에 관한 문제는 경마대회의 경주마나 요트대회의 요트만큼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Harper's Weekly*, 1894. 8. 4, “The Korean Incident”). 미국 언론은 대체로 영국의 『타임스(*The Times*)』 등 다른 나라 언론사들이 전하는 다양한 단신 기사를 정리해 전쟁 진행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보도를 나열했다. 전쟁 결과가 어떻든 조선은 어느 한쪽에 흡수될 것이며, 미국은 돈이나 별면 된다는 언급마저 있었다(*Jamestown Weekly Alert*, 1894. 8. 9, “They All Want War”). 관심이 적었던 만큼 부정확한 보도도 많았다. 심지어 고종이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설까지 유포되었다. 미국인들에게 조선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로서 동정의 대상에 불과했다. 미국인들은 전쟁에 관심이 없었으나 식량난에 시달리는 조선인을 위하여 밀가루 1,000배럴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승수가 조선을 대표하여 미국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The Morning Call*, 1904. 8. 10, “Koreans are Starving”).

미국 정부는 자국 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오랜 외교적 전통을 지켜 왔다. 단지 조선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전통적 정책이 바뀔 일은 없었다. 거중조정 요청을 받은 그레섬(Walter Q. Gresham, 1832~1895) 미 국무장관은 주일미국공사를 통해 약소국 조선을 침략하

는 청일전쟁은 ‘부당한 전쟁(unjust war)’이라며 일본의 전쟁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한국처럼 약하고 무력한 국가에 대하여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라는 논평이었다. 이에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정신 나간 실책’이라 혹평하며 그간 정부가 펼쳐온 불개입 정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무장관은 결국 일본 측에 사과했다. 이렇게 ‘부당한 전쟁’ 발언은 취소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가 청일전쟁에 대해 우호적 중재를 함께 하자는 다른 나라들의 제안 또한 마찬가지로 거부했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이처럼 미국 언론은 자국 정부가 전통적인 외교정책에 걸맞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우호적인 논조를 띠었다. 그러한 경향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예를 들어 1894년 11월 여러 매체에 등장한 ‘일본인을 더 존중해야(More Respect for Japanese)’라는 기사는 뉴욕 거주 일본인의 대생 인터뷰를 소개했다. 인터뷰는 그동안 미국에서 청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일본인이 전쟁을 거치면서 마침내 유럽인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문명국 일본’과 ‘후진국 청’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는 전쟁 후 더욱 굳어졌다. 미국 언론은 일본의 시각에서 청일전쟁 줄거리를 정리했고, 일본이 조선에서 진행한 각종 개혁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The Indianapolis Journal*, 1895. 4. 21, “Chino-Japanese War”).

요컨대 미국 신문에서는 청일전쟁의 진행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 언론 보도를 옮겨 적은 기사들이 주를 이뤘고, 정작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던 조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거나 피상적이었다. 이러한 경향과 달리, 조선에 직접 체류했던 두 미국인은 조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청일전쟁과 조선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했는가?

## 2. 데니가 본 조선: 청에 조공을 바치지만 엄연한 주권국가

먼저 소개할 데니(Owen N. Denny, 1838~1900)는 고종의 외교고문으로 일했던 미국인 법률가로, 청의 소개를 통해 외교고문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데니는 청과 생각이 달랐다. 당시 청은 조선이 자기 나라의 속방(屬邦)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에 파견되었던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는 갖가지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 데니는 이에 맞서 청과 조선의 역사적 관계와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지위를 묘사한 소책자인 『청한론(China and Korea)』(1888)을 집필했다. 이 일로 데니는 고문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조선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오리건주 포틀랜드(Portland)로 돌아갔다.

오리건주 지방지인 『코벨리스 가제트(The Corvallis gazette)』는 청일전쟁 개전 직후였던 1894년 8월 3일, 데니를 ‘동아시아와 조선 사정에 밝은’ 인물이라 소개하며 ‘상황 검토(The Situation Reviewed)’라는 제목으로 데니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데니는 먼저 미국 정부가 일본 측에 “부당한 전쟁을 반대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청일 관계에 관여할 바도 아닌 데다,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은 미일 관계를 긴장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용기 있고 번영하며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와 교제할 때 항상 솔직하고 정중한 대우로 품위를 유지한다고 평했다.

반면 데니는 『청한론』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선이 자국의 속국(屬國, vassal)이라는 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데니는 조선은 청에 조공을 바칠 뿐, 대내외적 문제에 대해 온전한 주권을 갖는 조공국(朝貢國, tributary state)이라고 설명했다. 또 1876년 이래 조선이 일본·미국·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등 여러 나

“

데니는 조선이 자국의 속국이라는 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국 간 갈등은 시간문제였으므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다. 데니는 덧붙였다.

“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쌍한 조선을 동정해야 한다.”

”

라와 체결한 조약은 모두 조선이 ‘주권국가’라는 이해에 기초한 결과였다. 데니는 청이 조선의 주인을 자처하면서 조선이 맺은 조약을 폐지하거나 무효화하고자 한다고 비판하였다. 데니는 자신이 고종의 고문이었을 때 주한일본공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청의 조약 위반을 지적했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나아가 텐진에 가서 리홍장(李鴻章, 1823~1901)을 만났을 때 만일 조선에 대한 ‘흡수(absorption)’ 정책을 고집한다면 청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닥치리라고 경고한 일도 덧붙였다. 데니는 양국 간 갈등은 시간문제였으므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다. 청일전쟁의 전망에 대해 청 사람들은 상업 수완이 대단하지만 일본인들과 달리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일본이 불리하리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데니는 조선은 동아시아 정치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만큼 전쟁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쌍한 조선을 동정해야 한다. 조선은 전쟁터가 되어 백성들은 약탈과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라는 황폐화될 것이다. 정부는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파산할 것이다. 고종은 백성에게 충실할 뿐만 아니라 냉

철하고 근면하며 진보적인 인물이다. 자신을 도와 더욱 진보된 서구 문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줄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탐구한다. 이는 청 사람들에게는 짜증을 유발한다. 나는 고종을 섬기는 동안 왕의 폐위와 살해를 목표로 한 청 공사의 음모를 두 차례 발견하고 폭로했다. 일본인들은 조선 정부를 없애려는 청 사람들의 욕망을 잘 알고 있으며, 만일 그들이 고종을 일본으로 데려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전쟁이 끝나고 고종을 왕위에 복귀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 3. 카펜터가 본 조선: 아름다운 기회의 땅

다음으로 카펜터(Frank G. Carpenter, 1855~1924)는 미국 오하이오주 맨스필드 출신으로 저널리스트, 여행가, 사진가, 강연가로 활동했다. 카펜터는 주한미국공사까지 올랐던 선교사 출신 외교관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과 친분이 있었다. 알렌은 박정양 공사 시절 공사관 참찬관(오늘날의 서기관)으로서 일했는데, 카펜터는 공사관 바로 근처에 살았다. 카펜터는 1888년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 사정에도 휩했다. 앞서 소개한 데니가 조선을 폄하하는 청국의 언론플레이에 맞설 때 상담해야 할 사람으로 카펜터를 꼽았을 정도였다[오웬 니커슨 데니 저,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1, 『데니文書』(한국사료총서 28), Letter 61(Denny to Frazar, Feb. 4th, 1890), 180쪽]. 카펜터는 1894년에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했다. 당시 그는 여러 언론사들의 후원을 받아 여정에 올라 조선·청·일본 세 나라를 방문했다.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카펜터는 고종의 외국인 고문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 1846~1899)의 도움을 얻어 통역사 박씨를 데리고 다녔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여러 신문 매체는 카펜터가 보낸 편지 형식의 기고문을 앞다투어 게재했다. 몇몇 언론은 카펜터가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삽화



카펜터와 통역사 박씨

*Evening Star*, 1894. 8. 4, "Carpenter in Korea (by Frank G. Carpenter)"

를 그려 기사 중간에 곁들이기도 했다.

직접 동아시아 땅을 밟았던 카펜터의 기고는 현장감이 넘쳤다. 생생한 목격담은 교통·통신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 미국 독자들이 마치 가보지 않은 아시아를 직접 가보았다고 느낄 만큼 자세했다. 전쟁 준비와 관련하여, 카펜터는 상하이에 있던 강남조선창(江南造船廠, 지금의 조선소) 방문 경험을 설명하면서 청 북양함대 소속 군함과 장착한 장비를 소개했다. 다른 글에서는 일본이 충분한 식량과 전화선 등 전쟁 물자를 갖춘 반면, 청은 굶어죽기 직전인 가난

한 조선 사람들에게 조랑말과 소, 쌀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비교하였다(*The Morning Call*, 1894. 8. 19, "Korea as a Battle Field").

조선과 관련하여 카펜터가 다룬 주제는 면적, 인구, 한성과 제물포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일반 백성에 대한 관리들의 착취, 여성의 지위, 끔찍한 형벌, 미신, 불결한 도로위생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주한미국공사 실(John M. B. Sill, 1831~1901), 서기관 알렌과 함께 고종을 알현한 경험담 등도 다뤘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의 스위스'라며 아름다운 경관에 찬사를 보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 등 정치적 문제도 자세히 소개했다. 수백년간 압제를 받아온 백성은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처지로, 지난 2년간 관료의 착취가 심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라 한반도 전역이 불안하며,

## 포커스 I

남부 지역 봉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The Evening star*, 1894. 7. 28, "The War in Korea"). 관리들의 부정부패 아래 착취당하는 온순한 조선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할 수 없어 노동할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소개했다. 카펜터는 농민봉기가 고종이 아닌 관료들에 대해 일어난 것이었으니, 만일 농민군 진압을 위해 지원군을 불러

들이지 않았더라면 청일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적었다(*The Indianapolis Journal*, 1894. 9. 2, "Extortion in Corea").

카펜터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일본으로 망명했던 김옥균이 홍종우가 쏜 총에 맞아 죽고, 상하이에서 옮겨온 김옥균의 시신이 양화진에서 능지처참 되어 각지에 전시된 일도 소개했다. 시적 감수성을 타고났으며 공자의 도(道)를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조선 사람들이 김옥균을 그렇게 처리했음을 믿을 수 없다면서, 조선은 야만과 문명이 뒤섞인 신기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대원군이 선교사들을 참수했던 일이나 역적의 처자식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거론하고, 죄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소개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조선과 청의 손에 넘어가는 포로들은 화를 입으리라고 내다봤다(*The Evening Star*, 1894. 8. 11, "The Killing of Kim").

그런데 카펜터는 전쟁 한복판에서 조선을 '기회의 땅'으로 여겼다. 카펜터는 미국이 조선에 단독 공사관 건물을 보유한 데다, 여러 미국인들이 조



김옥균 처형

*Evening Star*, 1894. 8. 11, "The Killing of Kim (by Frank G. Carpenter)"

“

청일전쟁 시기 조선을 직접 경험했던 미국인들의 조선 관련 기사는 언뜻 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청보다 일본의 승리가 조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조선에서 차지할 돈벌이 기회와 미국인들의 영향력이 확장될 여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

선 정부 안팎에서 일한다고 소개했다. 고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알렌을 비롯해 새로 부임한 실 공사와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 등 선교사들을 예로 들었다(*The Indianapolis Journal*, 1894. 9. 2, “Extortion in Corea”). 또한 청일전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한국은 개방될 것이고, 한반도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풍부한 자원의 예로서, 카펜터는 고종의 일화를 꺼냈다. 궁궐 전기공사 대금을 치러야 했던 상황에서, 고종은 미국인 전기기사에게 사금과 금괴 두 상자를 호위도 없이 달랑 짐꾼을 통해 들러 보냈는데 그중엔 주먹만 한 금덩어리도 있었다. 조선에는 금뿐만 아니라 구리·황동·무연탄 등 온갖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기술이 부족해 초보적인 채굴만 이뤄진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The Morning Call*, 1894. 8. 5, “Carpenter in Korea”). 이처럼 청일전쟁 시기 이미 카펜터는 “미국 투기꾼들이 광산과 철도의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라 예견했다. 이러한 미국인들을 위한 ‘기회’는 전쟁 후 미국인이 운산 금광과 경인철도 이권 계약을 획득하면서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청일전쟁 시기 조선을 직접 경험했던 미국인들의 조선 관련 기사는 외국 보도를 옮겨 신는 데 분주했던 일반적인 언론 기사보다 훨씬

포커스 I



고종과 왕세자 외  
다양한 삽화

*The Morning Call*,  
1894. 9. 16, "An Audience  
with the King of Korea  
(by Frank G. Carpenter)"



성환전투  
(Battle of Sei Kwan)

*The Morning Call*,  
1894. 10. 13,  
"Sues for peace"

---

## 포커스 I

풍부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했다. 언뜻 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보다 일본의 승리가 조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조선에서 차지할 돈벌이 기회와 미국인들의 영향력이 확장될 여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김희연(金希妍, Kim, Hee-yeon)**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근대 한미관계사를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에서는 각종 이권 획득을 통하여 조선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 했던 주한미국공사 알렌의 활동을 살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근대 사료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청일전쟁은 국제법상 ‘적법’했을까?

오시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머리말

청일전쟁(1894~1895)은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전쟁이었을까? 지금까지 청일전쟁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심도 있는 국제법적 분석은 부족해 보인다. 국제법적 분석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역사적 배경, 원인, 인과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는 해당 사안에 적용될 국제법과 그 적용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며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즉, 당시 법규칙과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에 적용될 정당한 근거와 논리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다. 때로는 이러한 법적 판단 결과가 도덕적 함의도 갖는다. 일반 대중에게는 적법하다는 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일전쟁은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했을까? 청일전쟁이 수많은 근현대사와 연관을 맺고

“  
청일전쟁의 결과가 20세기 중반에 국제법적으로  
부정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국제법에 따른 평가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각은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거대 담론에 따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청,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주의 화이질서(華夷秩序)에서 벗어나, 일본에 의한 지배질서로의 변화를 알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에 서구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근대 질서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동아시아 근대사를 논하며 청일전쟁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다시 청일전쟁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문제를 논할 이유가 있을까? 청일전쟁의 적법 여부는 과거사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 청일전쟁은 지금에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결과가 20세기 중반에 국제법적으로 부정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는 타이완(Formosa)과 평후제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타이완의 영유권은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부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이 강화조약의 1947년 초안은 189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일본의 영토 팽창을 부정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의 결과로 인한 영토 할양 등을 사실상 부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보자면 국제법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일본의 활동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기엔 지면의 한계상 이 글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강화조약에서 <시모노세키조약>을 부정했다는 사실은 청일전쟁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해 볼 동인이 된다. 당시 서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청일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을까?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종주권 사안과 같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청일전쟁을 당시 국제법의 기준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청일전쟁의 전개와 국제법적 기준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일전쟁의 역사적 배경으로 조선에서의 여러 개혁 움직임 속에서 발생한 임오군란(1882)을 기점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자 청이 대원군을 납치하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로 인해 대청 관계와 관련한 논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1884)을 진압하기 위하여 청이 군대를 동원하는 등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다. 결국 양국의 개전을 막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리홍장(李鴻章)이 1885년 5월 31일 <텐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게 된다. <텐진조약>에는 양국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고 일방이 조선에 군을 파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문서로 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1894년 3~4월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고 조선이 청에 파병을 다시

요청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동년 6월 9일 해군을 부산과 제물포에 집결시킨다. 당시 일본은 청이 <텐진조약>(1885)을 어긴 것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6월 12일 인천에 일본군을 파병한다. 6월 21일(음력)에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를 사실상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1894년 7월 25일 영국 상선 고승호(高陞號)가 아산에서 침몰되는 사건은 청일전쟁의 도화선으로 알려져 있다. 청의 요청으로 고승호는 청의 군을 조선에 파병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약 1,100명의 중국인이 탑승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 순양함에게 고승호는 나포되었고, 4시간가량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 측의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 본 사건은 영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일본의 배상 등으로 무마되었다. 고승호 관련 무력 충돌이 7월 25일에 발생하였지만, 정작 청일전쟁 선전포고는 8월 1일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청일전쟁의 배경을 보자면, 상당히 복잡하여 구체적인 전쟁 개시의 원인과 동기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매우 복잡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상황을 제국주의적 역사 전개 측면에서 일반화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 또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즉 법규범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사실관계 설명만으로 충분치 않다. 청일전쟁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청일전쟁 발발의 역사적 배경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청일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이유는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정당 원인(just cause)’으로 전쟁을 개시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19세기 말에는 자연법상 ‘정당 전쟁론(Just War Theory)’이

“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그 기준이 되는  
1894년 8월 1일 자 선전포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폐지되었고 무차별전쟁론이 득세한 시기라는 견해가 우세해 왔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정당 원인은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거 자연법 시대의 정당 전쟁론이 이미 많은 부분 실정법으로 관습법화 되었고, 주권을 침해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했다. 사실 전쟁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쟁을 무차별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청일전쟁만 하더라도 선전포고를 통하여 자신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는가? 법실증주의적 체계로 변화하였다고 하여, 주권이라는 국제법의 근간에서 파생된 영토보존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그 기준이 되는 1894년 8월 1일 자 선전포고(declaration of war)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8월 1일 자 선전포고에는 당시의 복잡한 상황이 담겨 있는데 역시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선전포고에는 조선의 속국(dependency)관계 문제, 조선의 행정 개선 사안과 청의 방해, 동양의 평화에 대한 위협 등이 그 근거로 포함되어 있다. 청의 선전포고에는 청과 조선의 조공관계, 요청에 의한 무력 개입(간섭), 일본의 부당한 무력행사, <텐진조약> 위반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일본과 청의 선전포고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크게 세 논점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글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 3. 구한말 조선의 법적지위와 조공관계

먼저 조선의 법적지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선전포고에서 일본은 청이 조선을 속국으로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하고, 청은 조공관계라 주장하였다. 이는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청에 조공을 바치는 행위가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의미일까? 정치권력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에 존재하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항상 평등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 관계가 법적으로 속국(dependent state)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당시 국제법에 따를 때 속국은 국내 사안에 대해 자율성을 갖지만, 외교관계를 포함한 대외 사안에 대해 타국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19세기 말 이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소위 유럽의 종주권(suzerainty)이라는 표현이 차용되기도 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는 중세 유럽에서도 자주 사용한 법적용어가 아니다. ‘종주’와 ‘영주’를 혼동하지 말고 구분해야 할 필요도 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대영제국과 같은 모국과 식민지와의 관계를 지칭할 때 종주권이 수사학적으로 사용된 측면도 있다. 나아가 중세 유럽에서 영주와 봉신의 관계는 계약적 관계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유럽의 봉신관계에서는 계약문서를 만들고 서명하여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영주의 전쟁에 봉신은 군사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중세시대 봉신의 성(城)이 공격을 당하면 봉신의 상위 영주는 군사적으로 지원할 계약적 의무가 있었다. 때로는 아예 상위 영주가 구체적인 시간 안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이 없으면 계약이 파기되어 봉신의 의무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

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자면 종주권 등 유럽적 법리를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다.

”

그러나 동아시아의 조공관계는 예(禮)에 기반한 유교적 세계관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조공관계는 국가 간 외교적 관계의 의미뿐 아니라 무역관계를 내포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자면 종주권 등 유럽적 법리를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다.

#### 4. 청의 군대 파견이 가진 법적 성격

청의 군대 파견 사안 또한 논점이 된다. 선전포고에서 청은 조선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청이 군대를 파견하는 행위 자체가 <텐진조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조선이 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청에 의한 개입이 전쟁 개시의 ‘정당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 사안이다. 먼저, 당시 국가 관행 차원에서 보자면 국내 소요를 해소하기 위한 ‘요청에 의한 개입’이 법리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있던 휘튼(Henry Wheaton)의 『만국공법』에서도 ‘요청에 의한 개입’ 표현이나 유사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일반론적으로 국가가 자국 영토 보전의 침해를 동의했다는 차원에서 ‘동의’에 기초하여 군 개입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내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 군을 파견하는 사안과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청이 <텐진조약>을 어겼기에 같이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약을 어기면 ‘복구’라는 무력행사가 가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복구’ 차원에서 무력행사를 했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역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력행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선전포고와 전면전을 개시할 정당 원인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일본의 정당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청의 정당 원인은 되기 어렵다. 무력행사인 복구의 대상은 청이 될 것이고, 조선이 아니다. 청의 조약 위반으로 일본이 대응하여 군을 파견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전쟁 개시의 원인이 아니다. 합법적인 전쟁과 다른 형태의 군사활동은 구분이 필요하다.

## 5. 일본의 행정개혁 요구가 지닌 법적성격과 그 적법성

일본의 선전포고에는 문명론적 사고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일본은 조선이 자국의 질서와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자문에 의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로 인해 한국이 독립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지는 나라가 될 것이지만, 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의 노력으로 조선이 ‘국가들의 가족’, 즉 근대 문명국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법적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이를 청이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일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중국은 위와 같은 일본의 행정개혁 요구를 ‘괴롭힘’으로 평가

“  
일본의 자문으로 조선이 행정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조선을 문명화하는 데 기여했거나  
직접적으로 문명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

하였다. 일본의 주장에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문명론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자문으로 조선이 행정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조선을 문명화하는 데 기여했거나 직접적으로 문명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권리와 이익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사업을 청이 방해했다는 주장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법적지위를 확보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조선의 독립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내재하는 논리다. 일본의 이러한 논리의 전제에,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배가 예정된 세력에 있는 국가로 보는 시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 6. 청일전쟁은 문명 국제사회 내의 전쟁이었나

한편, 청과 일본의 선전포고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더 근본적인 국제법적 문제가 있었다. 청일전쟁은 당시 문명 국제사회의 국제법 영역 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을까? 휘튼의 『만국공법』을 포함해서 당시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문명국 간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청과 일본의 전쟁에 국제법이 적용되는 전쟁인지가 문제 된다.

당시 저명한 국제법학자 웨스트레이크(John Westlake)는 청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을 평가할 때 불평등조약을 언급하며 일본도 머지않아 이러한

“  
청일전쟁 전후 국제법학자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이 완전한 문명국으로 인정받았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는 불평등조약의 실재 여부에 따라 국제법 적용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일본이 서양 국가들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 개정된 첫 사례는 1894년 7월 16일 영국과 개정한 사례다. 이 조약은 1899년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1894년 7월 24일에 청일전쟁이 개전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직 일본이 다른 서양 국가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일전쟁 개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국 이외의 국가들과는 아직 불평등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898년판 국제법 저서에서 홀란드(Sir Thomas Erskine Holland)는 청일전쟁을 하나의 장으로 다루었지만, 청일전쟁에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긍정하지 않았다. 1894년 8월 11일 자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이 전쟁은 ‘법적전쟁(legal war)’이 아니고 국제법은 미개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쟁을 제시하기도 했다. 홀란드는 러일전쟁(1904~1905)이 종료한 후에 입장을 바꾸어서 일본이 문명국이라 주장하였다. 1912년 오펜하임(Lassa F. L. Oppenheim)의 저서에서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강대국이 되었으므로, ‘국가들의 가족’의 정회원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청일전쟁 전후 국제법학자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이 완전한 문명국으로 인정받았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894년 7월의 전쟁은

청과 일본이 완전한 문명국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 된다.

## 7. 맺음말

청일전쟁은 지금의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국제법적 미제를 남겨두고 있다. 조선은 국제법상 주권을 향유한 독립국가였을까? 다른 문화권에 서양의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할까? 청이 주장했던 ‘요청에 의한 개입’은 어느 정도로 정당할까? 당시 무력충돌에 관한 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정당 원인을 인정했을까? 일본은 청일전쟁 시기 이전부터 조선을 식민지배하고자 했을까? 한편, 일본이 완전한 문명국이 아니었는데 문명개화를 위하여 개전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전쟁 개시의 원인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 청일전쟁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국제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오시진(吳時稹, Oh, Si Jin)**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국제법 역사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부에서 법이론과 법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법실증주의, 자연법론, 식민주의 등 국제법의 역사적·이론적 접근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외교부 독도정책자문위원, 법무부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국제법학회논총 편집위원, 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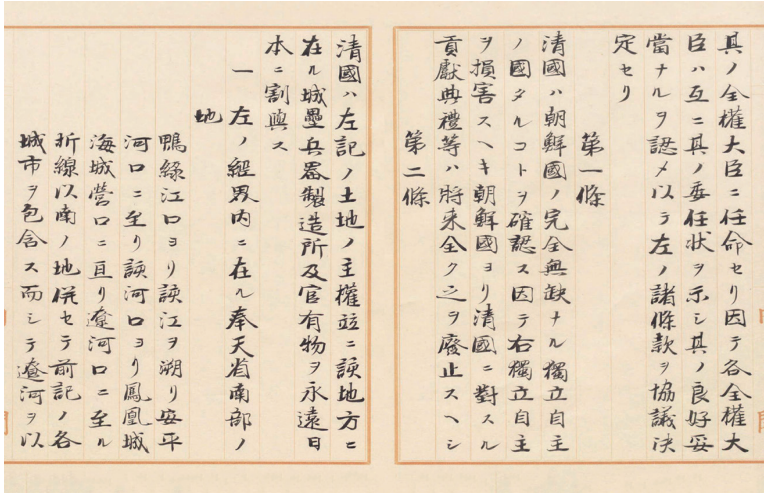
# ‘종주권’ 문제와 청일전쟁

이동욱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

## 1. 청일전쟁과 종주권 문제

올해는 청일전쟁(1894~1895) 발발로부터 130년이 되는 해다.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은 조선이 자국의 ‘속방(屬邦)’이라 주장하던 청을 무릎 꿇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 19세기 중반 이래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로 인해 점차 해체되고 있던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는 청일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청일전쟁은 중국의 쇠퇴와 일본의 부상이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청일전쟁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종주권(suzerainty)이다.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동학농민운동에 편승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재확인하고자 했던 청 정부의 파병이었으며, 전쟁이 일본의 완승으로 끝나고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의 제1조는 청이 조선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그 독립자주를 해치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조공의례 등을 앞으로 모두 폐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일본국립공문서관(日本國立公文書館, archives.go.jp)

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 의 나라(自主之邦)로서 일본과 평등하다”라고 규정한 이래, 줄곧 공식적으로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자국의 이해를 고려한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10년 뒤, 일본의 언론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획득하였다고 자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종주권은 청일전쟁뿐 아니라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질서의 격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 2. 전근대 한중 관계의 근대적 해석

조선은 건국 초부터 명과 조공관계를 형성했으며, 병자호란(1637) 이후로는 250여 년 동안 청과 조공관계를 유지했다. 명과 청은 조선을 ‘사예조공지국(四裔朝貢之國: 사방의 이민족 땅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또한 중국의 왕조는 조선을 외번(外藩)·번속(藩屬)·번봉(藩封)·속국(屬國) 등으로 부르곤 했다. 양국 사이에 형식적인 군신관계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이 중국 왕조에 예속되거나 중국 황제의 주권하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중국 황제가 책봉을 통해 외국 군주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책봉을 받은 군주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하고 조공을 바쳤다. 이로써 중국 황제는 이념적으로는 천하의 ‘대일통(大一統)’을 이룬 ‘천자(天子)’가 될 수 있었으며, 현실적으로는 두 나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조공관계가 주변국에 유리한 면도 있었다. 유교적인 맥락에서 중국 황제는 ‘사대(事大: 큰 나라를 섬김)’의 대가로 ‘자소(字小: 작은 나라를 아끼고 보호해 줌)’를 실천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진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청과 조선의 조공관계는 구미 열강 및 러시아, 일본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선두로 하는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은 단계적으로 동아시아에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는 소위 ‘조약체제’가 형성되었으며, 동서양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서양인들은 동아시아에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자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서양 국제법 서적을 번역하여 서양인들의 국제관계에서 통

용되는 준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국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번속 또는 속국으로 부르던 국가가 유럽의 국제법 기준에서 독립된 국가인지 아니면 중국의 종속국(dependent state) 또는 속령(dependency)으로 간주해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서양 열강의 입장에서 그들이 중국에 종속된 존재라면 해당 국가와의 문제를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그들이 독립된 국가라면 해당 국가와의 문제는 그 국가와 직접 교섭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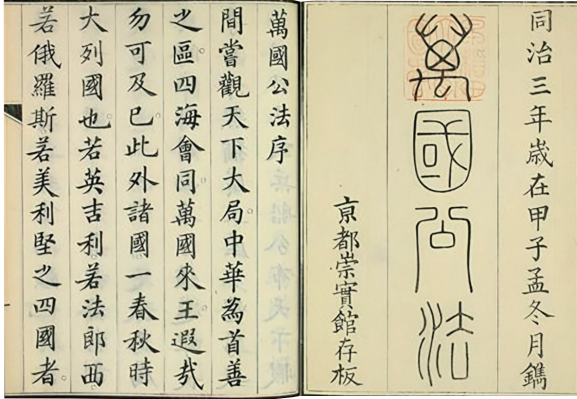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렇게 시작되었다. 제2차 아편전쟁(1858~1860)과 태평천국운동(1851~1864)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던 시기, 청의 외교를 관장하던 공친왕(恭親王)은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등 열강의 조선 침략에 대해 ‘조선은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지만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라며 조선 문제로 인해 서양과의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했다. 청의 예부상서 완칭리(萬壽麟) 역시 병인양요 직전 조선의 조공사절을 만나 조선은 청에 구원을 요청하지 말고 스스로 잘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64년에 번역, 출판된 국제법 서적 『만국공법(萬國公法)』의 영문판 원저자인 휘튼(Henry Wheaton)은 다른 나라에 공물을 바치거나 ‘봉건적’ 관



청의 공친왕(1833~1898)

1860년 베이징정변을 일으켜 자희태후와 함께 권력을 장악한 이래 1884년 청프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실각할 때까지 청의 대외정책과 양무운동을 총괄했다. 1894년 청일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다시 외교와 군무를 총괄하였다.



『만국공법』(1864)

동아시아 최초의 체계적인 국제법 번역서인 『만국공법』이 유일한 국제법 참고서이던 시절, 청은 조선이 명의상의 조공국 또는 속국일 뿐인 자주국이라고 주장했다.

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주권이 이러한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독립국(independent state)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다.<sup>1</sup> 따라서 청이 반복적으로 조선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조선이 청의 명의상 속국(nominal vassal) 또는 조공국(tributary state)일 뿐 사실상 독립국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 3.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강화

1880년대에 들어서면 청의 관료와 지식인은 조선을 지정학적으로 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면서 서양 열강이 속국이나 식민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청이 1870년대 유럽에서 있었던 독일 통일 이후 제국 정부

1 Henry Wheaton, 1855,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p.51, p.274.

“  
1880년대에 들어서면 청의 관료와 지식인은 조선을 지정학적으로  
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면서  
서양 열강이 속국이나 식민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

가 소속 공국들의 주권을 삭감한 사례, 서구 열강이 제2차 크림전쟁 결과에 개입해서 오스만제국에게 불가리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에 대한 종주권을 승인해 준 사례, 프랑스가 베트남과 맺은 조약에서 베트남이 독립국임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청의 종주권을 부정한 사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879년 일본이 청의 조공국이었던 류큐를 합병하고, 청과 러시아가 이리(伊犁) 문제를 두고 전쟁의 위기를 겪으면서 청의 외교 실력자 리홍장(李鴻章)은 조선에 대한 불간섭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꼈다. 조선은 청의 동북방을 지키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조선이 타국, 특히 러시아의 수중에 넘어가면 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의 국력으로는 조선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스스로 서양 제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을 위해 항구를 열어 여러 열강이 조선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세력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여 열강의 세력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리홍장의 계획은 주일공사 허루장(何如章)의 새로운 주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허루장은 조선이 스스로 서양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방임한다면 열강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간주하여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럴 경우 청이 유사시에 조선에 간섭할 권리를 잃

게 되므로, 서양의 속국처럼 청이 조선의 외교를 관장하여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이 서양과의 외교 수립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 리홍장은 <조미수호조약> 체결을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허루장의 의도대로 조약문 안에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기하고자 하였다.<sup>2</sup> 그러나 미국 측 대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고종이 다음 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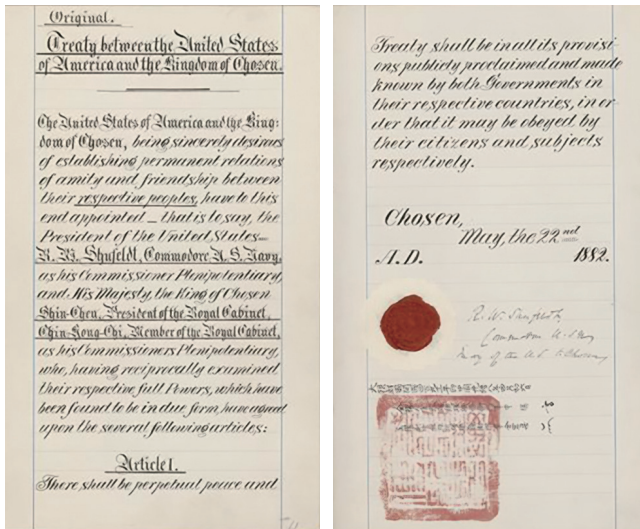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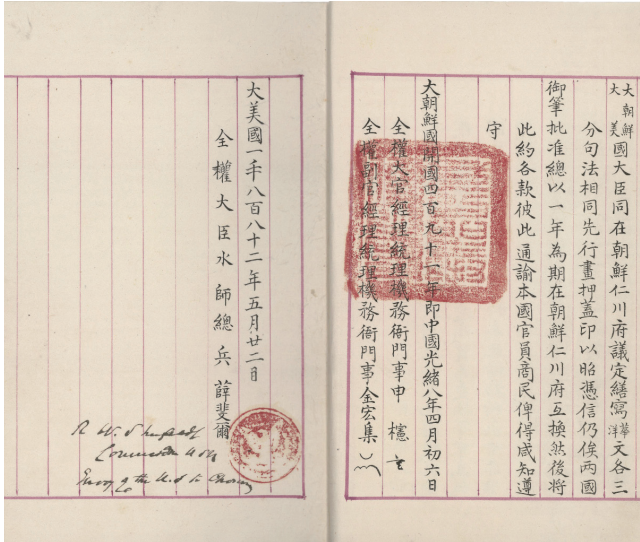
살피건대 조선은 줄곧 중국의 속방이었지만 내치와 외교는 모두 대조선국 군주가 스스로 주관해왔습니다. 지금 대조선과 대미국이 서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관계에 속합니다. 대조선국 군주는 조약내의 각 조항을 반드시 주권 국가들의 공례(국제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조선국이 중국의 속방으로서 행해야 하는 일체의 사항은 모두 대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은 청의 속방이지만, 이는 조선과 청 양국 사이의 문제일 뿐 조선이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갖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조선이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미국이 조선이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인식하여 조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즉, 조선의 문호 개방을 통해 청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속국’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되, 뒷날을 위해 청이 조선에 대해 종주권

2 이동욱, 2019, 「청말 종주권 개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사총』 96.

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朝鮮國照會」, 『淸季中日韓關係史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674쪽.

포커스 I



〈조미수호통상조약〉 원본

서구 열강이 조선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조약으로, 한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archive.history.go.kr)

“  
조선은 청의 속방이지만, 이는 조선과 청 양국 사이의 문제일 뿐  
조선이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갖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

을 가진다는 명분을 걸쳐 놓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리홍장의 계획은 조선이 미국·영국·독일 등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성공하는 듯했으나, 임오군란의 발발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청 정부는 3,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내란을 진압하고 ‘속방’을 보호하기 위한 종주권 행사임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종주권 강화는 갑신정변과 조러밀약사건, 고종의 자주외교 등 조선의 청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리홍장은 한반도에서 청과 일본, 영국과 러시아가 충돌할 뻔한 갑신정변과 거문도사건을 겪으면서 조선에 대한 직접 통제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 안정을 추구했다. 청일 <텐진조약>(1885)을 기점으로 조선에서 청일 양국의 군대를 철수했으며, 러시아와 구두합의를 통해 조선의 현상유지(status quo)와 영토보전을 약속받고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 군사적 공백상태는 북양함대의 정기적인 한반도 순시, 위안스카이(袁世凱) 파견을 통한 감시와 협박, 전신 설치와 세관 장악, 차관 대출 등으로 만회하였다. 기존의 조공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영국의 비공식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와 유사한 근대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이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같은 서양식 조약을 모방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명문화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청은 청일전쟁 직전까지도 기존의 조공의례는 축소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1880년대 조청 관계가 전통의 연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키지만, 사실 이러한 전통적인 조공의례의 지속은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을 지지하는 관습법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의 이러한 행위가 다른 열강이 공식적으로 조선을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 또는 종속국으로 간주하도록 할 정도로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소위 ‘종주권’의 내용이 불분명했다. 조선과 청의 갈등이 불거진 1886년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 해인 1893년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각각 조선과의 수호조약, 즉 국교 수립 조약을 체결 또는 비준했다.<sup>4</sup> 이는 이들 국가가 조선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대부분의 열강이 주청공사 또는 주일공사가 조선공사를 겸직하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열강은 조선과의 관계보다 청이나 일본에 대한 고려를 우선하였다.

#### 4. 종주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일본의 개전 외교를 주도한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는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작성한 회고록 『건건록(蹇蹇錄)』에서 전쟁의 원인이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오랜 권력쟁탈전이었다고

4 안종철, 2024, 「조선-이탈리아 수호통상조약(1884)의 체결 및 비준: 조선의 유럽 공사 파견의 계기로서」, 『아세아연구』 67-1, 348쪽.

## 포커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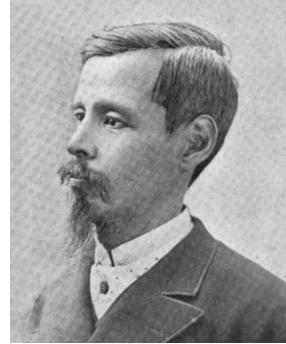
밝혔다. 또한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은 그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sup>5</sup>

일본은 당초부터 조선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종래 청한(淸韓) 양국 사이에 존재해온 애매한 종속관계를 단절시키려 하였다. 이에 반하여 청국은 고래로부터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조선이 자기의 속국인 것을 세계에 표방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청한의 관계는 보통 공법상(公法上)에서

기준하는 종주국과 속국과의 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명의상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힘써왔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법은 국제법을 의미한다. 즉 그는 청이 조선에 대해 주장하는 종주권은 국제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으나, 청은 조선을 완전무결한 속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방해하는 일본 세력을 몰아내어 조선을 독점하고자 획책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청 정부가 전통적인 조청 조공관계를 근대적인 종주국-속방 관계로 변경하려 시도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무쓰의 고백과 같이 조선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일본의 명분은



무쓰 무네미쓰(1844~1897)

5 무쓰 무네미쓰 저, 김승일 역, 1993, 『건건록』, 범우사, 36~37쪽.

## 포커스 I

어디까지나 청과의 세력 쟁탈을 위한 것이었다.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시작한 전쟁에서 일본이 청군에 연전연승하고 승기를 잡자, 무쓰는 종전 이후 일본의 조선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을 내각에 제시했다.

1. 조선이 독립국임을 완전히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에 간섭하지 않는 안
2. 조선을 명목상 독립국임으로 인정하되 일본이 단독으로 직·간접적으로 영구히 또는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 즉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안
3. 청일 양국이 협상하여 조선 영토를 보전하는 안
4. 조선을 벨기에나 스위스와 같이 열강이 공동으로 보호하여 중립화하는 안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조선에 파견하여 내정개혁을 감독하고자 했다.<sup>6</sup> 이는 고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측의 저항에 부딪혔으나, 그로부터 10년 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일본의 조야에서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경축하였다. 19세기 말 제국주의시대의 국제법적 기준에서 본다면, 과거 청은 조선이 자주국, 즉 주권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조공관계를 근거로 종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스스로 주장하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과 군사적 보호의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공인받지 못했다. 그러나 서구 문

6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contents.history.go.kr), 「청일전쟁 당시 일본의 대한 정책」.

명의 충실한 모범생임을 자처한 일본은 제2차 보어전쟁(1899~1902) 시기 영국의 남아프리카 트란스발공화국에 대한 종주권 주장을 지지하는 영국 국제법학자들의 이론을 충실히 실천하였다.

일본이 주장하는 ‘종주권’은 사실 국제법상의 보호권(protectorate)과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일본은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밀약, 러일전쟁의 군사적 승리를 통해 조선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한 뒤,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을 피보호국으로 만들었다.

## 5. 맺음말

21세기도 4분의 1이 지난 오늘날, ‘종주권’이라는 키워드는 중국 학계에서 전통시대 중국의 대외관계를 설명하는 ‘종번관계(宗藩關係: 종주국과 변속국의 관계)’라는 용어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근대적인 국제질서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낙후하고 기형적인 관계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대 중국에서는 동아시아의 ‘종번관계’가 서양의 주권국가 체제보다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질서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종번관계’에서는 종주국인 중국이 주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근대 서양의 제국주의 질서와 비교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중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과 간섭은 ‘종번관계’에 대한 낭만적인 미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한편, 일본 학계 일각에서는 조청 종주권 문제나 조선의 자주외교를 두고 두 나라가 충분히 근대화되지 않은 전통의 관성 속에서 근대 외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두 나라와 달리 근대 서구 문명의 모범적 학습자였다는 우월적인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 포커스 I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학습하고 실천한 유럽의 국제법은 비유럽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던 시절의 국제법이 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국을 전통적인 ‘종번관계’ 속 종주국으로 위치 짓거나 서구 문명의 충실한 학습자로 규정하여 타국에 대한 우월성을 드러내는 인식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 강대국의 주변국에 대한 간섭과 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자성적인 역사인식이 요구된다.



### 이동욱(李勳旭, Lee, Dong-uk)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베이징대학 역사학과에서 청말 대조선 정책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강사, 일본 나고야대학 방문학자, 건국대학교 교양대학 연구전임교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청일전쟁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史叢』 96, 2019), 「1880~1890년대 동서양 종주권 개념의 변용과 착종: 영국과 청조의 사례를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 157, 2021) 등이 있다.

# 청일전쟁 130년, 중국의 역사기억과 기념공간의 변화

류자평 산동대학 역사학원 교수

## 1. 들어가며

1894년 중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청일전쟁은 북양함대의 괴멸, 청의 영토 할양 및 배상금 지급으로 막을 내렸다. 역사학자가 바라보는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구도와 역사적 흐름을 바꾼 국제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반식민지로 전락한 반면 승전국인 일본은 점차 신흥 제국주의 강국이 되어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무력 확장을 더욱 노골화하다가 결국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자멸하였다. 중국에게 청일전쟁은 줄곧 굴욕의 기억으로 가득한 역사였다. 동시에 이러한 역사기억은 끊임없이 중국인의 구망도존(救亡圖存: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구하고 민족의 생존 도모) 의식을 일깨워준다. 량치차오(梁啓超)의 말과 같이 “우리나라가 4,000년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은 실로 갑오년의 전쟁에 패해서 타이완을 할

\* 편집자 주: 중국에서는 청일전쟁을 갑오년에 일어난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라는 뜻에서 ‘갑오중일전쟁(甲午中日戰爭)’, 줄여서 ‘갑오전쟁(甲午戰爭)’이라 부른다. 저자의 중국어 원문에서도 갑오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번역문에서는 청일전쟁으로 수정하고, 문맥상 저자의 의도를 살려야 하는 곳에서는 ‘갑오’라는 용어를 썼다.

“  
중국에게 청일전쟁은 줄곧 굴욕의 기억으로  
가득한 역사였다. 동시에 이러한 역사기억은 끊임없이  
중국인의 구망도존 의식을 일깨워준다.  
”

양하고 은화 2억 냥을 배상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지난 130년 동안 청일전쟁에 관한 역사서술과 역사기억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청일전쟁과 관련된 기념물과 기념공간 역시 이러한 변화와 긴밀하게 맞물려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기념공간이란, 국립묘지, 기념비, 기념관, 유적, 사적지 등과 같이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을 생각하고 숭배하고 추모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기념물과 기념물이 위치한 역사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기념물이 직관적이고 생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면, 역사적 환경은-원래의 것이든, 복원된 것이든-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몰입형 체험을 일으킨다. 따라서 기념공간은 텍스트나 영상물보다 더욱 쉽게 관람객의 오감과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대중의 기억을 각성하거나 각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근대 이후 중국의 청일전쟁에 대한 역사기억 및 기념공간의 변화 과정,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사상교육, 기억의 형상화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중국의 청일전쟁에 대한 130년 동안의 역사기억 변화

중국의 청일전쟁에 대한 역사기억은 청 말기 이래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에 따른 대중의 정서와 정

치적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다.

청일전쟁 직후부터 청이 멸망할 때까지, 청 조야에서는 청일전쟁의 패배를 ‘나라의 죽음(國之殤)’, ‘나라의 치욕(國之恥)’으로 규정하였다. 사회 여론은 그 책임을 리홍장(李鴻章)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실책으로 돌렸다. 량치차오는 “대중의 비난과 질타가 오롯이 리홍장에게 쏟아졌고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희태후(慈禧太后)가 자신의 환갑 축하연을 위해 해군 경비를 유용해 이화원을 개축한 것을 또 다른 패전의 원인으로 보고 조정의 사치와 부패를 맹비난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역사적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훗날의 갑오국치(甲午國恥) 서사의 기초가 되었다. 사회 여론이 미래의 역사 기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군벌 갈등 등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혼란과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 시기 외국 열강들의 침탈도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혼란을 틈타 중국 정부에 ‘21개조’를 강요하고 산둥 지역을 점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인들에게 청일전쟁 패전의 아픈 기억을 재차 상기시켰다. 이 시기 중국의 청일전쟁에 관한 역사서술에서 조선의 망국과 일제강점의 수난은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부단히 반복되었다. 이는 국치로서의 청일전쟁에 대한 기억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이 중국을 잠식하려는 음모와 야심을 민중들이 정확히 알도록 일깨워주려는 것이었다.

9·18사변(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동북3성을 침공하여 점령하였다. 이때부터 중일전쟁(1937~1945) 시기까지 청일전쟁은 다시 중국 사회가 주목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 청일전쟁을 ‘국치’로만 기억하였던 것과 달리, 당시 중국 정부와 엘리트 지식인들은 청일전쟁

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하고 깊이 성찰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이 청일전쟁 패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청일전쟁과 만주사변을 비교하여 두 전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중국의 정치·군사 등 방면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중일전쟁 시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켰음을 강조했다. 이 시기의 청일전쟁과 관련된 역사기억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 전체가 청일전쟁 패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민중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크게 향상하고 민족정신도 강화했다는 것이다. 청일전쟁의 역사기억은 중국의 장기간에 걸친 항일전쟁에 정신적 원동력과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였고, 승리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부터 문화대혁명(1966~1976)에 이르는 시기의 청일전쟁에 대한 역사 서술과 기억은 해당 시대의 특징과 정치적 입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청일전쟁을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했는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국인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일본이 일으킨 청일전쟁과 비교하여 당시의 국제정치를 청일전쟁의 역사기억에 반영하였다. 이 시기에는 청일전쟁의 패배 원인을 새롭게 조명하여 청 조정의 무능, 양보와 타협이 패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와 대조하여 인민의 참여와 결연한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60년대의 연극 <갑오해전(甲午海戰)>과 영화 <갑오풍운(甲午風雲)>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예술작품으로, 북양해군 장병과 인민대중의 영웅적인 항쟁과 활약을 묘사하는 동시에 청 정부의 부패와 적에게 투항한 행위를 비판하여 제국주의와 봉건 잔재에 반대하는 ‘인민전쟁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1978년에 실시된 개혁개방은 중국의 정치·경제·이념·문화 등 전반에

“  
청일전쟁에 대한 서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 왔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역사기억은  
오늘날의 중국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청일전쟁에 관한 학술연구 및 문예창작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인들도 청일전쟁을 개방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당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공화국을 향하여(走向共和)>, 영화 <1894, 갑오대해전(一八九四·甲午大海戰)>을 비롯하여 방송사들이 쏟아낸 관련 다큐멘터리는 청일전쟁의 역사적 장면과 인물들을 생생하게 담아내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를 이끌어 냈고, 특히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리훙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근대 중국 해군의 건설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역사의 재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2014년 중국에서는 청일전쟁 1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청일전쟁을 되돌아보면서 ‘해권(海權)’, ‘국가안보’, ‘평화수호’ 등이 토론의 주요 화제가 되었다.

요컨대, 청일전쟁에 대한 서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 왔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역사기억은 오늘날의 중국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 3. 청일전쟁의 기념공간: 마장(馬江) 소충사(昭忠祠)부터 류궁다오(劉公島)까지

청 말기부터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한우충동(汗牛充棟)’이라 할 만큼 방대한 양의 저술이 쏟아졌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관련된 기념물이나 공간은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9개월이나 지속된 청일전쟁에서 북양해군은 크고 작은 군함 30여 척을 잃었으며, 텐장타이(田莊臺)전투에서만 2,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하는 등 육해군 전사자의 수가 최소 2만 4,000명(4만 명이라는 설도 있음)에 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 정부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국고가 부족했으며, 조정 안팎과 백성들 사이에서 북양군을 전쟁 패배의 원인으로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은 적절한 추모를 받을 수 없었다. 평양전투에서 전사한 청군의 사령관 쥐바오꾸이(左寶貴)의 시신은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산둥성 핑이(平邑)에 살고 있던 유족들이 피 묻은 조복과 조화(朝靴)로 장례를 치르고 좌충장공사(左忠壯公祠)를 세워 가족들이 그에게 제사 지낼 장소를 마련하였다. 전사한 장수 중 소수만이 청 정부가 국사관(國史館)에서 편찬하는 전기에 이름을 올리고 포상과 지원을 받았을 뿐, 전사한 장병 대부분은 이름조차 전하지 않는다.

청일전쟁 당시 정원함(靖遠艦)을 이끌었던 예주꾸이(葉祖珪, 1852~1905)는 1904년 남·북양해군 겸 광둥수사(廣東水師)의 제독을 맡고 있었다. 전쟁에 희생된 수많은 전사자의 넋을 위로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던 그는 텐진에 북양해군 소충사(昭忠祠)를 건립하자고 제

## 포커스 I

안하였다. 당시 즈리(直隸: 지금의 허베이) 총독이던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가 이를 승인하였다. 해군 소총사는 텐진에 세워진 회군(淮軍) 소총사를 본떠 지어졌다. 그러나 발의한 때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심지어 중간에 건설비용까지 다른 곳에 전용되는 바람에 사당 규모도 축소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1911년 완공을 앞둔 소총사가 신해혁명의 발발로 공사가 중단되고, 텐진의 사립학교인 각민학교(覺民學校)가 오랫동안 그 건물들을 점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1920년 해군부가 이 사당을 조사한 후에야 밝혀졌으나 결국 회수하지 못했다. 텐진은 북양해군이 창설된 곳이지만, 갑오해전 때 희생된 장병들을 위한 기념지가 되지 못했고 ‘북양해군 소총사’ 또한 역사 속의 단어로만 남게 되었다. 오히려 청일전쟁 격전지에서 멀리 떨어진 푸젠성 마장(馬江)의 소총사가 청일전쟁 당시 해군 전사자의 영령을 위로하는 기념공간이 되었다.

마장 소총사는 마장해전(馬江海戰: 1884년에 발발한 청프전쟁)에서 전사한 장병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1885년에 건립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1920년 3월, 당시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란젠수(藍建樞, 1855~1929)를 비롯한 베이징 정부의 해군 9명이 해군 총장을 통해 청일전쟁과 마장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이곳에 합사(合祀)하자고 제안하였다. 1922년 4월 중앙정부는 해군의 합사 요청을 받아들여 보수비 5,000위안을 지원하였고, 당시 푸저우(福州) 선정국(船政局) 천자오창(陳兆鏘, 1862~1952)이 주관하여 사당을 새로 개축하고 열사묘를 증축하였다. 같은 해 10월 8일 오후, 두 전쟁에 희생된 영웅들의 합사의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당시 중화민국 대통령 리위안홍(黎元洪, 1864~1928)은 전 북양해군 장군 싸전빙(薩鎮冰, 1859~1952)을 중앙정부의 대표로 보내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 포커스 I

이때부터 마장 소총사는 마장해전과 청일전쟁 당시 해전에서 순국한 장병의 위패를 모시게 되었다. 이는 근대에 정부에서 해군을 위해 세운 최초의 기념장소였다. 이후 수년 동안 중국 해군은 이곳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특히 9·18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청일전쟁의 뼈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소총사의 위령제는 ‘설갑오치(雪甲午恥: 청일전쟁의 치욕을 씻어내자)’와 ‘항전필승(抗戰必勝)’을 다짐하는 총동원 행사가 되었다.

류궁다오(劉公島)는 산둥성 웨이하이만(威海灣)에 위치한 3.15km<sup>2</sup> 면적의 작은 섬이다. 이 섬은 중국 최초의 근대식 함대인 북양해군을 탄생시킨 기지로서, 이와 관련된 역사 건축물과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섬에 있는 대부분의 역사 건축물을 관할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다.

1984년 웨이하이가 연안개방도시로 지정되면서 해군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대중에게 관광지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웨이하이시는 최초로 개방된 관광지인 북양해군제독서(北洋海軍提督署), 일명 해군공소(海軍公所)에 북양해군제독서 문물관리소를 설치하고 유적 및 문화재 보호사업에 착수하여 해군제독서(海國提督署), 덩루창(丁汝昌) 우소(寓所), 수사학당(水師學堂), 동홍포대(東泓炮臺) 등 여러 역사 건축물에 대한 보수와 보호 작업을 진행하였다. 1992년 문물관리소는 중국갑오전쟁박물관(中國甲午戰爭博物館)으로 개칭되면서 중국 최초의 청일전쟁 관련 유적 박물관이 되었고, 1994년에는 청일전쟁 100주년을 맞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박물관 명칭을 휘호로 써주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류궁다오에 갑오전쟁진열관(甲午戰爭陳列館)을 새로 증설하여 청일전쟁 당시 침몰한 전함의 잔해를 모아 추가로 전시

하였다.

청일전쟁의 격전지 중 한 곳인 랴오닝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전쟁유적의 발굴, 보호, 활용 등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적지는 주로 단둥시, 다렌시, 판진시(盤錦市)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우렌청(九連城)과 후산(虎山)의 청군방어진지, 안핑강(安平河) 전장유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둥시는 이 유적들을 시급 문화유산(文物保護單位)으로 등록했으며, 다렌시 허상다오포대(和尚島炮臺)와 진저우부도통아문 유적지(金州副都統衙署舊址) 등도 각급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판진시에 위치한 텐좡타이 유적에는 청일전쟁 전사자의 무덤, 옛 전장, 포대 유적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은 중국의 국가급 문화유산(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국가박물관 해양문화유산보호센터가 각 지역의 고고학연구팀과 손잡고 랴오닝성 동강시(東港市)와 좡허시(莊河市), 웨이하이만 등 지역을 중심으로 청일전쟁 당시 침몰한 전함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물리적 탐사기술, 멀티빔 소나(sonar), 천부층 소나 등 현대과학기술을 통해 치원함(致遠艦), 경원함(經遠艦), 정원함(定遠艦), 초용함(超勇艦) 등의 침몰 위치를 파악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대량 발굴하였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전함의 부품, 무기, 탄약, 생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침몰선의 정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 2016년 단둥시는 중국갑오해전유적박물관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좡허시도 박물관 신축 및 갑오해전-경원함 테마관 설립을 계획하여 초기 방안 수립과 사전 검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병과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 건설비용 부족 등으로 인해 두 기념관의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청일전쟁의 기념공간은 지난 130년 동안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며 크게 확장되었다. …  
시장과 정치의 역량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청일전쟁 기념공간의 급속한 발전을 함께 견인하고 있다.

”

마장 소총사에서 지금의 류궁다오 청일전쟁 기념 시설, 랴오닝성 단둥 등지의 청일전쟁 유적지, 해양고고학을 통해 밝혀낸 침몰선 유적에 이르기까지, 청일전쟁의 기념공간은 지난 130년 동안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며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근대 중국 국운의 부침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전벽해의 변화는 두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40년간 이어진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중국의 종합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문화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정부는 이 덕에 다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 대규모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능력을 갖췄다. 특히 해양고고학 발굴작업은 기술적 요구가 매우 높고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중국은 역사와 문화재 보호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사상정치교육에 혁명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가 지도자는 여러 차례 혁명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이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 진일보한 혁명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전파를 요구하였다. 요컨대, 시장과 정치의 역량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청일전쟁 기념공간의 급속한 발전을 함께 견인하고 있다.

#### 4. 류궁다오, 애국주의와 정치교육의 기지가 되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중국 근대사를 구(舊)민주주의혁명시기와 신(新)민주주의혁명시기로 구분한다. 청일전쟁은 구민주주의혁명시기에 발생한 중요한 역사사건으로, 관련 문화재와 유적은 모두 혁명문화재에 속한다. 따라서 청일전쟁 기념공간에 대한 가치의 발굴과 해석, 전파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된다.

류궁다오는 혁명문화재를 통한 교육의 중요한 기지로서 일반적인 관광명소의 기능을 뛰어넘어 사상정치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류궁다오는 애국주의교육을 주축으로 삼아 국가애국주의교육시범기지, 전국해양인식교육기지, 국가국방교육시범기지, 홍콩·마카오 청소년건강기지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을 위한 여러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수십 개 대학이 류궁다오와 협력을 맺어 학생들의 사상교육 실습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산둥대학은 중국갑오전쟁박물관과 국가혁명문물협동연구센터를 공동 설립하여 혁신적이고 모범적이며 선도적인 혁명문화 연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이들 기지를 통해 학생들이 중화민족의 굴욕과 분투, 부흥의 역사적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애국주의 감정을 기르고, 열심히 공부하여 조국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중국의 국가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류궁다오를 방문하여 중요한 담화를 발표한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 그는 “나는 늘 이곳에 와서 느끼고, 교육을 받아보고 싶었다. 경각심을 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하며, 13억 중국인은 분발하여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류궁다오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이 말은 청일전쟁

“

청일전쟁 기념공간에 대한 가치의 발굴과  
해석, 전파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된다.  
류궁다오는 혁명문화재를 통한 교육의 중요한 기지로서  
일반적인 관광명소의 기능을 뛰어넘어 사상정치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기념공간으로서 류궁다오의 위상과 이 섬이 안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현재 류궁다오는 ‘중화민족이 각성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청일전쟁의 뼈아픈 교훈에서 지혜를 도출하고, 인민의 위기의식과 전략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여 평화로울 때 위급함을 생각하고,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기초하여 류궁다오는 2019년부터 청일전쟁 기념공간을 활용한 국가안보교육체계 구축에 착수하여, 현재 전국 최초로 ‘총체적 국가안보관’에 초점을 맞춘 교육연수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 5. 맺음말

청일전쟁과 관련한 130년 간의 역사서술과 그것이 보여주는 역사기억을 회고해 보면, 역사서술과 역사기억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으며, 당시의 정치상황과 사회환경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청일전쟁의 기념공간은 사회적 기억의 중요한 매개체로 대중의 역사기억을 일깨우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이에 국가는 이러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유지함으로써 청일전쟁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그 심원한 역사적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에서 시작하여 ‘갑오년의 치욕을 갚자’는 국치(國恥)로서의 기억으로, 다시 지금도 강조하는 애국주의정신, 국가안보교육, 평화를 소중히 하자는 메시지 등으로 그 목표가 끊임없이 조정되거나 변화하면서 선명한 가치와 신념의 방향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사기억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탐색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여러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기념공간에 대한 서술이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 기념공간의 디자인이 대중의 미적 감각에 부합하는지, 기념공간이 충분히 애국심을 자극할 수 있는지 등은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밖에 기념공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념활동의 형식, 내용, 홍보 방식 등 여러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10주년 기념일마다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청일전쟁 발발 1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행사 규모는 120주년 때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산둥성해양고고학센터와 산둥성박물관은 8월 초 지난(濟南)에서 ‘청일전쟁 침몰선 해양고고학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고 관련 학술회의를 열 계획이다. 관례대로라면 중국사학회와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공지된 소식이 없다. 동아시아 정세가 복잡다단한 지금, 어떻게 적절한 방식으로 청일전쟁을 기념해야 국가의 존

---

## 포커스 I

업을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중일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인가, 당국의 신중한 사고와 대응이 필요하다.



**류자펑(劉家峰, Liu, Jiafeng)**

산둥대학 역사학원 교수, 국가혁명문물협동연구센터 부주임  
주요 연구 분야는 근대 중외문화교류사, 중국기독교사이며, 예일  
대학교 폴브라이트 방문학자를 역임하였다. 『중국 기독교 향촌건  
설운동 연구(中國基督教鄉村建設運動研究)』 등 여러 편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포커스 II

# 청일전쟁 - 기술과 질병

---

**과학 기술과 근대전쟁:**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철도와 전신 이용**

위신광 산동대학 역사학원 박사후연구원

---

**근대 동아시아 정보전쟁과 암호 해독:**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최덕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청일전쟁과 역병:**

**일본 근대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토 마사키 아이치교육대학 교육학부 조교

# 과학 기술과 근대전쟁

##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철도와 전신 이용

위신광 산동대학 역사학원 박사후연구원

청일전쟁은 근대 일본이 감행한 최초의 대외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의 전장은 한반도, 랴오둥반도, 산둥반도, 평후열도(澎湖列島), 타이완 등 동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따라서 본국에서부터 대규모 작전부대와 군수품을 어떻게 전장으로 수송하고, 본국과 해외 전장 사이에서 명령과 정보를 어떻게 신속히 전달할 것인지는 일본군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이 병사, 군수품, 군사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당시 운수와 통신 분야의 최신 기술인 철도, 전신, 전화를 이용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본 국내 철도망의 정비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군사수송 시스템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전국에 산재한 동원된 부대와 군수품을 비롯한 모든 인력과 물자

“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군사수송 시스템은 전국에 산재한 동원된 부대와  
군수품을 비롯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군도인 히로시마에 집결시키는  
국내 수송 단계, 인접한 우지나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적절한 상륙지점까지 운반하는 해외수송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를 군도(軍都)인 히로시마(廣島)에 집결시키는 국내수송 단계, 다음으로는 인접한 우지나(宇品)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적절한 상륙지점까지 운반하는 해외수송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히로시마가 선정된 이유는 바로 옆에 군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구가 있다는 조건 이외에도 당시 도쿄에서 오사카를 지나 서쪽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철도역이 히로시마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육군이 보유한 7개의 사단은 도쿄(근위·제1사단), 센다이(제2사단), 나고야(제3사단), 오사카(제4사단), 히로시마(제5사단), 구마모토(제6사단)에 분산, 주둔하고 있었다. 각 사단의 병력은 두 개의 연대가 보병 사단 소재지에 주둔하고 나머지 두 개는 사단 관내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청일전쟁 개전 전인 1894년 6월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철도 노선은 이미 아오모리부터 히로시마까지 개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슈의 사단 소재지는 모두 철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독립적으로 주둔하는 12개의 보병 연대 중에도 철도가 통과하지 않은 지역은 시바타(新發田)와 가나자와(金沢) 두 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 밖에 규슈도 모지항(門司港)을 기점으로 사가(佐賀)를 거쳐 제6사단 소재지인 구마모토까지 철도가 부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도로 병사들을 모지항까지 수송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들은 굳이 히로시

## 포커스 II



### 청일전쟁 시기 일본 국내의 철도망

출처: 松下孝昭, 2015, 『鉄道と軍事拠点』, 林博史·原田敬一·山本和重 編, 『地域のなかの軍隊9軍隊と地域社会を問う』, 吉川弘文館, 17쪽 지도를 바탕으로 작성

마의 우지나항까지 오지 않더라도 모지항에서 운송선을 타고 직접 상륙 지점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개전에 앞서 대본영은 <군사철도수송규칙(軍事鐵道輸送規則)>과 <임시 군용화물수송수속(臨時軍用貨物輸送手續)>도 발포하여 군사수송의 편의를 위해 철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수통신장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는 국내 철도를 동부(아오모리-도쿄), 중부(도쿄-고베),

서부(고베-우지나), 규슈, 홋카이도 등 5개의 구역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철도 선구(線區)마다 사령관을 배치하여 철도 군사수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중요한 기차역에는 정거장사령부(停車場司令部)를 설치하고 담당 장교를 파견하여 통과하는 인마에게 급양을 제공했다.

## 2. 급조된 육군의 임시군용철도

하지만 문제는 히로시마역에서 우지나항까지 병사와 물자를 운송하는 교통수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6월 2일 일본 내각의 조선 파병 결의와 5일 대본영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 파병을 위해 히로시마와 우지나항을 잇는 철도의 부설이 시급해졌다. 7월 12일, 대본영에서 운수와 통신을 총괄하는 데라우치 운수통신장관은 히로시마현의 지사(知事)를 통해서 히로시마역에서 우지나항까지 임시군용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측량작업을 산요철도회사(山陽鐵道會社)에게 맡겼다.

다음 날 지시를 받은 산요철도회사는 즉시 여러 명의 기사장(技師長)을 현청으로 보내 작업을 시작했다. 히로시마역에서 우지나항까지 5.75km에 불과한 구간의 측량작업은 대략 7월 14일부터 시작하여 8월 5일에 종료할 때까지 23일이 소요되었으나, 그 구간의 부설공사는 8월 4일에 시작하여 집중적인 작업을 통해 8월 20일에 준공함으로써 1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임시군용철도는 많은 병사를 수송하여 청일전쟁에서 큰 역할을 발휘했고, 전후 일반 철도로 개축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시기 철도를 이용한 군사수송은 일본 국내에서만 가능했다. 타이완 북부에 청이 부설한 짧은 구간의 철도가 있기는 했으나, 주요 해외 전장인 조선이나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에는 아직 부설되지



청일전쟁 시기의 우지나 군용철도(1894·1895년경 촬영)

출처: 廣島市郷土資料館 編集・發行, 2018, 『廣島市郷土資料館平成30年度特別展-明治時代の廣島』, 株式會社中本本店印刷, 35쪽.

않았기 때문에 러일전쟁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기계력에 의존할 수 없었던 육상수송력의 열악함, 특히 한반도에서의 어려움이 누차 지적되었다.

### 3. 전장의 통신 인프라 시설과 이용

기술 발달의 측면에서 청일전쟁 시기 첨단 통신수단은 육상전선과 해저케이블로 구성된 유선 전신과 전화기였다. 전신과 전화는 평화 시기에 사회의 신경중추로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는 신속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중에서 전화기는 단거리용으로 일본 국내에

“

기술 발달의 측면에서 청일전쟁 시기 첨단 통신수단은 육상전선과 해저케이블로 구성된 유선 전신과 전화기였다. 전신과 전화는 평화 시기에 사회의 신경중추로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는 신속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의 도구이기도 하다.

”

서만 일부 사용되었지만, 전신은 전장과 국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전장과 전장 사이의 정보 전달까지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선 전화기의 이용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전화기가 발명된 이듬해인 1877년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주요 관청과 경찰서 그리고 철도와 광산을 비롯한 큰 회사의 전용전화로 활용했다. 1890년에 들어서야 일반의 교환전화도 도쿄-요코하마부터 점차 정비되기 시작했다. 1894년 9월 대본영을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옮긴 후에 히로시마에도 내각 출장소와 대본영을 연결하는 전화선이 가설되었다.

청일전쟁 이전의 전신망은 일본 본토에서는 도쿄-나가사키까지 육상 전선이 가설되어 있었고, 유럽으로 가는 국제선은 나가사키-블라디보스토크, 나가사키-상하이 간 해저케이블, 사가현 요비코(呼子)-쓰시마-부산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부설되어 있었다. 조선에는 한성-의주(청 소유), 한성-원산(조선 소유), 한성-부산(조선 소유) 등 육상전신망이 구축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의주선은 청의 봉황성(鳳凰城)을 거쳐 평토편(奉天: 현 선양)에 이르러 청의 육상전신망과 연결되었다.

전쟁 중에 전신은 주로 일본의 대본영과 해외 전장의 야전부대 사이에서 명령과 보고의 전달매체로 사용되었다. 전신망이 정비된 한성과 대본

영은 시간 단위로 교신이 가능하여 1894년 9월 15일 평양전투 결과를 전하는 제1보가 전장으로부터 대본영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6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한편 청일전쟁에서 부산-요비코 간 해저케이블로 교신했던 전보는 무려 10만 통에 달했고, 그중에 95%가 가나문자로 작성된 군사와 외교 전보였다.

당시 국제전보의 경우 종군기자와 통신사에게도 허용되었는데, 로마자로 작성된 5,000통 내외의 전보가 우정정보부의 검열을 거쳐 나가사키에서 상하이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구미 각국으로 전송되었다. 청일전쟁에서 부산-요비코를 오가는 가나문자의 전보가 급증하자 이를 관리하는 대북전신회사(大北電信會社, The Great Northern Telegraph Company)는 정보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저케이블 한 줄을 증설했다.

#### 4. 전시 전신선의 독점을 둘러싼 각축

전시에는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의 군사정보를 취득하는 첩보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의 소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의 전신선을 파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군사작전의 일부였다. 청일전쟁 시기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군이 청의 정보 전달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복궁을 점령하기 전날 감행한 전신선 무단 절단사건과 그 후 일본군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한성-부산 간 임시군용전신선을 무단으로 가설한 사례를 들 수 있다.

1894년 7월 22일 밤, 일본군은 한성-의주 간의 전신선 절단을 자행했다. 이 전신선은 중국 대륙을 거쳐 상하이에서 해저케이블로 나가사키

“

전시에는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의 군사정보를 취득하는  
첩보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의 소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의 전신선을 파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군사작전의 일부였다.

”

까지 가고 나가사키에서 도쿄에 이르는 정보 전달의 루트였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중요한 통신선이었다. 하지만 개전을 앞두고 청의 외교기관, 군대, 본국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일본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복궁 점령사건이 세계에 알려져 서국 열강의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도 있었다.

일본은 6월 임시 혼성 제9여단을 인천에 상륙시켰을 때 청이 장악한 전신선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오사카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에서 두 척의 선박을 빌려 부산과 인천 간의 연락선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정보 전달은 매우 느리고 수시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성-부산 간의 전신선 확보가 절실했다. 따라서 일본은 개전을 앞두고 자국의 군용전신선을 확보하기 위해 한성-부산 간의 전신선을 조선 정부의 허락 없이 강제로 가설하기로 했다.

6월 17일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는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를 통해 작동되지 않고 있던 한성-부산 간 전신선의 신속한 수리와 양도를 조선 정부에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운수통신장관 데라우치를 만나 일본 육군이 직접 군용전신선을 가설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6월 22일 무쓰는 오토리에게 훈령을 내려 한성-부산 간 전신선을 수복하라고 조선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일본 육군이 공사를 담당하겠다고 조선 정부에 통보하도록 지시

했다.

가설공사를 전담한 데라우치 운수통신장관은 6월 26일 공병 제5대대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전신가설지대를 편성했고, 7월 1일 밤 전신 가설 자재와 함께 조선으로 파견했다. 제1지대와 제2지대는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중간지점인 충주에서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전시에 통신망의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였기 때문에, 일본은 한성-부산 간의 전신선 가설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 정부의 승인 없이 전신선 가설공사를 7월 하순에 착수하여 8월 중순에 완공했다. 전쟁이 발발되자 8월 20일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이 강제로 체결되어 일본은 무단으로 가설한 군용전신선의 합법화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위신광(魏晨光, Wei Chenguang)**

산동대학 역사학원 박사후연구원, 국가혁명문물협동연구센터 연구원

중국 다롄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주제는 일본 근대 군사사 및 정치·외교사이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교류와 전쟁으로 본 일본사』(공저), 『중국경제의 현대화: 제도 변혁과 구조전환』(공역), 『韓國的對外關係與外交史(高麗篇)』(공역, 근간),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대만총독 인사와 육군 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의 위상」 등이 있다.

# 근대 동아시아 정보전쟁과 암호 해독

##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최덕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1. 머리말

전근대와 근대 전쟁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전신(telegraph, 電信)의 사용 유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목격되고 있듯이 현대전은 정보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외교사와 전쟁사 연구의 공백지대에 남아 있는 정보전쟁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1942년 초 미국 해군정보국은 일본제국함대의 특수암호 JN-25를 해독했다. 정보국은 AF로 알려진 지점으로 일본의 대규모 공격작전이 계획되어 있음을 간파했으나, AF가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미국 해군은 그곳을 미드웨이(Midway)로 추측했다. 미드웨이는 하와이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AF를 미드웨이로 추측한 것이 정확한지 판별하는 방법은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미드웨이기지 담수장치 고장으로

“

20세기 초의 러일 간 정보전쟁은 19세기 말의 청일 간 정보전쟁과 달리 일본의 암호를 러시아가 해독하는 사례였다. 이는 정보전쟁의 양상이 개별 국가 단위에서 정보동맹 차원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로 식수가 부족하다는 일반전문을 발신하고 일본이 이를 감청할 경우,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AF가 미드웨이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요컨대 거짓 전문을 미끼로 사용해 일본 해군이 지칭한 AF가 미드웨이였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분수령을 이룬 미드웨이해전의 성패는 여기서 갈리게 되었다. 적국의 계획과 구상에 대해 미리 간파하고 준비했던 측과 그 상대측의 전투 결과는 명약관화했다.

청일개전(1894) 무렵 일본은 청의 암호를 해독했다. 일본이 청의 암호책(codebook)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던 이유는 먼저 개전하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선전포고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 외무성은 주일청국공사 왕평짜오(汪鳳藻)에게 조선 주둔 일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제1차 절교서’(6. 22)를 보냈다. 왕 공사가 이를 암호전문으로 총리아문에 보고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6월 23일 왕 공사는 총리아문에 장문의 암호전문을 발신했고, 일본 외무성 전신과장 사토 아이마로(佐藤愛麿)는 이 전문을 복제, ‘제1차 절교서’와 대조했다. 역설적이게도 청일개전 무렵 일본이 청의 기밀전보(密電) 해독 열쇠를 확보하는 과정은 미드웨이해전을 앞두고 미국이 재현하였다.

20세기 초의 러일 간 정보전쟁은 19세기 말의 청일 간 정보전쟁과 달리 일본의 암호를 러시아가 해독하는 사례였다. 이는 정보전쟁의 양상이

개별 국가 단위에서 정보동맹 차원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세기 이후 정보패권경쟁이 강화되면서 정보동맹 혹은 파이프 아이즈(Five Eyes)와 같은 정보공동체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2. 청일 정보전쟁과 일본의 청국 암호 해독

정보통신혁명은 공간의 제약을 넘어 세상이 한집처럼 사는 지구촌을 탄생시켰다. 근대의 속도와 범위를 규정하는 발명품인 전신은 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보 이동의 공로(公路)가 되었다. 그럼에도 개방된 정보의 교통로인 전신에서 정보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기술 수용에서의 차이 때문이었다. 일본이 청의 비밀전문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해독이 가능했던 정보 우위의 배경에는 전신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청일 양국의 입장 차가 있었다. 요컨대 청이 전신 수용을 지체하여 청일 간 정보 격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의 글로벌전신네트워크 접속을 가로막았던 주요한 장애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사상이었다. 전신은 청에서 제국주의 열강이 청을 침략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청 관리들이 전신 가설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이유가 바로 풍수(風水)였다. 토지를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간주하는 풍수사상의 시각에서는 전주를 세우는 행위가 풍수를 해하는 것이고, 전신의 가설은 서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중국인을 희생시킨 행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전통이라는 관성의 힘은 전신의 수용에서 청이 일본보다 뒤처지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반면 일본에서 전신은 문명의 이기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확장판이었다. 자동차가 인간의 발이 되어주듯이 전신은 인간의 새로운 신경망으

로 받아들여졌다. ‘전신’이라는 단어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1866)에 처음 등장한다. 후쿠자와는 도쿄의 중앙전신국 개국(1878. 3. 25)에 열광하여 전신을 국가의 신경망으로 비유하였다. 그가 “중앙전신국은 머리와 같고 지국들은 말초신경들”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전신을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청일개전 무렵 동아시아의 전신망은 세계 전신망의 약 65%를 지배했던 영국의 전신왕(電信王) 펜더(J. Pender)가 장악하고 있었다. 1866년 대서양 해저케이블 가설에 성공한 펜더는 이후 세계 전신시장을 독점하여 영국 중심의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그는 1871년 런던-지중해-인도-싱가포르-홍콩을 잇는 아시아의 남방노선 가설을 주도했고, 같은 해 덴마크의 대북전신회사(大北電信會社, The Great Northern Telegraph Company)는 시베리아-블라디보스토크-나가사키-상하이로 연결하는 북방노선을 완공했다. 펜더의 회사와 대북전신회사는 외형상 각자 독립적인 회사였지만, 후자가 전자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펜더제국(The Eastern Cable Empire)의 구성원이기도 했다. 따라서 펜더제국은 영국 정부의 후견하에 동아시아 전신망을 독점 지배하는 구조를 이룩함으로써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전신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이 전신을 활용한 근대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던 영국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군사작전을 도쿄의大本營에서 조직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통신망 구축이 개전의 전제조건이었다. 일본 육군에서 개전 전에 착수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경부 전선(電線) 가설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영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전신 가설이 자국의 동아시아 통신

“

**영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면  
청일 정보전쟁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과 청을 잇는 전신을 파괴하고 청의 암호전문을 가로채서  
해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국의 목인이 있었다.**

”

지배정책에 손상을 끼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결국 이를 묵인했다. 요컨대 일본의 청일전쟁 도발은 동아시아 정보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던 영국의 승낙으로 가능했다.

청일전쟁은 근대전쟁의 핵심기술인 통신시스템을 독점한 영국의 동아시아정책과 연동되어 있었다. 영국은 동아시아의 패권과 대청(對淸) 무역에 대한 기득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자의 등장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1891년 5월에 착공한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사업은 지정학적으로 영국의 특권적 지위를 위협할 중대한 도전이었다. 이 도전에 맞설 대책은 이른바 ‘방아용일책(防俄用日策)’이었다. 영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면 청일 정보전쟁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과 청을 잇는 전신을 파괴하고 청의 암호전문을 가로채서 해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국의 목인이 있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일본의 승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암호 해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일본의 청 암호 해독의 출발점은 개전 8년 전에 발생했던 국제분규로 시작되었다. 이 분규는 1886년 8월 나가사키를 방문한 청의 북양함대 소속 수병들과 현지 시민과 경찰 간의 무력충돌로 촉발된 나가사키사건이다. 청일 양측 87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은 전쟁의 길로 들어섰으며, 결국 아시

아 최강을 자랑했던 북양함대는 청일전쟁을 고비로 괴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일본이 청일전쟁 승전을 위해 나가사키사건에서 찾아낸 실마리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이 이 사건을 통해 획득한 승전의 실마리는 작은 암호책이었다. 충돌 과정에서 북양함대 수병이 분실했던 암호책의 최종 도착지가 바로 일본의 정보기구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암호체계 분석을 통하여 청의 기밀 전문 해독의 열쇠를 확보함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개전할 수 있었고, 원하는 조건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일본이 암호를 보유했던 사실은 저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망(1909) 30주년이 되는 해에 출간된 『기밀일청전쟁(機密日淸戰爭)』를 통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시모노세키강화 때도 청은 여전히 이 암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일본 측에 의해 해독되었다. 『기밀일청전쟁』에는 전전 및 강화회의 기간에 일본 측이 해독했던 37통의 기밀전보가 수록되어 있다.

### 3. 러일 정보전쟁과 러시아의 일본 암호 해독

러일전쟁 기간 스웨덴 주재 일본공사관 무관이자 대러 정보수집 및 러시아 후방교란작전을 수행했던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대령은 1905년 말 일본에 도착한 후 자신의 활동보고서 「낙화유수(落花流水)」를 제출했다. 참모본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비밀경찰 오흐라나(Okhrana)가 아카시 대령과 핀란드 및 조지아 독립운동가들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카시 대령은 오흐라나가 그의 무기 구입을 감시했으며 편지 검열뿐만 아니라 암호전문까지 해독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압호전문을 어떻게 해독했을까?

1906년 6월 러시아 출판사 수보린(Suvorin)에서 출간한 팸플릿 「러시아 혁명의 이면: 일본 자금으로 촉발된 러시아에서의 무장봉기(The Backside of the Revolution: Armed Rebellion in Russia with Japanese Funds)」에는 아카시 대령과 핀란드 독립운동가 질리아쿠스(Koni Zilliacus), 조지아 혁명가 데카노지(G. Dekanozi) 등과 주고받은 편지와 전문이 실려 있다. 팸플릿의 발간 목적은 러시아 비밀경찰이 확보한 이들 편지와 전문을 공개하기 위함이었다.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의 무장봉기를 선동하고 혁명정당들을 지원한 주역이 일본임을 폭로하고자 했던 것이다. 팸플릿 서문에는 일본의 무기 밀매와 러시아 혁명가들의 조국에 대한 배신을 표적으로 삼아 제정러시아에서 독립하려는 핀란드와 조지아의 민족해방운동가들의 대일 협력을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는 러일전쟁의 패전 책임을 차르정부에서 일본에 매수당한 러시아 혁명세력에게 돌리려는 정치적 음모도 있었다. 문제는 이 팸플릿이 즉각 독일 언론에 유포되어 베를린 최대의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러일전쟁이 종식되어 러시아는 일본과 갈등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음에도 왜 차르정부는 이 팸플릿을 공개했을까?

일본 참모본부는 아카시 대령에게 전후 러시아의 상황을 비밀리에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1906년 2월 독일 주재 무관으로 임명하여 베를린에 파견했다. 전쟁 기간 아카시가 구축해 놓은 정보망을 활용한다면 임무 수행이 어렵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아카시를 위험인물로 간주했던 차르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 해법은 유럽에서 아카시의 축출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이 증오했던 혁명세력과 아카시의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팸플릿을 러시아가 공개한 결과 아카시는 독일 주재 무관으로 근무한 지

“

아카시는 차르정부가 러시아에서 독립하려 했던 핀란드와 폴란드의 혁명가들을 탄압했던 방식을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했다. 그가 한국의 치안을 순경이 아닌 헌병이 주도하도록 도입한 헌병경찰제는 제정러시아의 공안제도가 그 모델이었다.

”

10개월 만인 1906년 12월에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일본으로 귀국한 그는 1907년 육군 소장으로 진급한 후, 한국주차 헌병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차르정부가 러시아에서 독립하려 했던 핀란드와 폴란드의 혁명가들을 탄압했던 방식을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했다. 그가 한국의 치안을 순경이 아닌 헌병이 주도하도록 도입한 헌병경찰제는 제정러시아의 공안제도가 그 모델이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Nicholas) 1세가 즉위 초에 데카브리스트(Dekabrist) 반란(1825)을 겪은 후 독립헌병군단(Independent Corps of Gendarmes)을 창설(1827)했던 목적은 봉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찰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러시아의 육군 헌병장교들이 혁명조직이나 정치범을 수색하는 절대권력을 장악한 이 제도는 국가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세기 서유럽의 정치문화에서 일상적이지 않았던 감시와 사찰이 러시아 특유의 정치문화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 4. 러프동맹과 정보협력

러시아와 프랑스는 각각 전제정과 공화정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정치

체제였음에도 1894년 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국이 되었다. 일종의 ‘계약결혼’으로 평가받은 이 동맹은, 프랑스에게는 독일의 침략에 대비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게는 프랑스의 자본 조달이 본연의 목적이었다. 이는 러일개전 무렵 러시아의 대외부채 400만 루블 가운데 300만 루블이 프랑스 투자자들의 몫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의 승전을 위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대러 정보협력은 일본의 암호전문을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일본의 초기 암호는 수천 개의 일본어 단어로 구성된 암호책을 사용하였다. 1885년 외무성이 해외공관과 통신하기 위한 암호 역시 단어에 해당하는 5자리 숫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통신하였다. 적어도 1900년대 초반에는 난수(random Number)를 추가하는 방식이 확립되지 않았다. 특히 러일개전 직전(1904. 2. 3) 일본이 영국에서 새로운 암호시스템을 도입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일동맹 체결(1902) 이후 동맹국의 암호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일본 외교관들은 영어전문을 작성하여 암호화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방식에서 영국식 암호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암호가 제3국에 의해 해독될 기회가 열렸다.

러시아 비밀경찰 오희라나는 일본 전문을 어떻게 가로채서 해독했을까? 오희라나가 일본 전문을 획득한 장소는 프랑스 파리였다. 일본의 암호전문이 유럽의 공관이나 도쿄의 외무성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파리우편체신국(Post and Telegraph Office in Paris)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절차상 일본의 전문은 이곳에서 비밀리에 복제되어 프랑스 정보국의 지시에 따라 파리 주재 러시아 오희라나에게 전달되었다. 일본의 비밀전문이 복사되어 러시아 비밀경찰에게 넘겨진 시발점은 러일개전 시점과 일치한다.

“

일본의 암호전문이 프랑스로 해독되었던 점은  
암호전문가들이 프랑스 정보국 소속이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러일전쟁 당시 중립을 선언했지만  
동맹국 러시아의 승전을 위해 물밑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

일본의 암호전문이 해독된 시점은 1904년 7월 말로 추정된다. 파리 주재 일본공관에서 도쿄로 발송된 대부분의 전문이 프랑스로 해독되어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보고된 후 모스크바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암호전문이 프랑스로 해독되었던 점은 암호전문가들이 프랑스 정보국 소속이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러일전쟁 당시 중립을 선언했지만 동맹국 러시아의 승전을 위해 물밑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의 오흐라나 파리지국 역시 프랑스 정보국에 암호 해독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답했다. 그럼에도 프랑스가 주도한 대일 정보 관련 러프 컬래버레이션은 러시아가 일본의 암호전문을 해독하였음에도 승전으로 이끌 수 없었던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러시아연방문서관(GARF)에 소장된 일본의 암호전문 가운데 알파벳 코드로 작성되지 않은 전문 대부분은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암호체계가 향후 탈서구화하는 단서가 되었다.

## 5. 맺음말

파리 주재 일본공사관의 비밀전문에 대한 프랑스어 해독문이 작성된 마지막 날짜는 1905년 3월 12일이었다. 프랑스는 이날 이후부터 더 이상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거나 이를 러시아에 보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그것이 평토편(奉天)전투(1905. 2. 20~3. 10)의 결과와 연동되었다고 보고 있다. 만주의 평토편 근처에서 벌어진 러일전쟁 최대의 지상전에서 러시아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침략 위협에서 프랑스를 구원해 줄 동맹국 러시아가 만주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상황은 유럽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프랑스는 러일강화를 속히 주선하여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복귀하길 기대했다.

프랑스가 러시아의 전쟁 지속 의지를 꺾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쟁차관 지원 중단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1905. 3. 12) 프랑스 은행단 대표들은 대러 차관 조건에 합의하였음에도 차관조약 서명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프랑스 은행단 대표들의 파리 소환 이유는 평토편 전투에서 러시아가 패전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상술한 러프 정보협력의 중단이었다. 자금과 정보가 차단된 차르정부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 결국 암호 해독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했지만, 전쟁의 변화 역시 암호 해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최덕규(崔惠圭, Choi, Deok-kyoo)**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제국 국제관계사와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관련 러시아 문서를 연구하였다.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 '러일정보전쟁과 코리아 휴민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 청일전쟁과 역병

## 일본 근대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토 마사키 아이치교육대학 교육학부 조교

### 1. 일본 근대사 연구에서 청일전쟁

일본 근대사 연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청일전쟁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195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청일전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정치사와 외교사 연구에서는 많은 성과가 나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왜 청일전쟁이 개전(開戰)하였는지, 청일전쟁의 결과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무엇을 초래하였는지 등 청일전쟁의 개전 과정과 결과가 갖는 의미를 일본 국내의 정치 상황과 국제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해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근대 일본의 제국화 기점을 확실하게 파악하려는 문제의식을 많은 일본 근대사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

\* 편집자 주: 이 글에서는 필자가 쓴 그대로 '역병'과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옮겼다.

그런 반면, 정치사와 외교사 연구에서 청일전쟁의 전장 실태를 분석하는 등 병사와 민중의 시

선에서 전쟁을 묻는 자세가 희박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전쟁과 군대를 병사와 민중의 시선에서 묻는다는 연구 자체는 1970년대 이후, 일본 근대사 연구 중에서도 많은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대다수가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중일전쟁, 러일전쟁 등에 관한 연구였다. 이들 전쟁에 비해 청일전쟁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상황이 바뀐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오타니 다다시(大谷正)와 하라다

게이이치(原田敬一) 편, 『청일전쟁의 사회사(日清戦争の社会史)』라는 획기적인 연구가 책으로 발간되었다. 편자는 정치·외교사 연구가 중심이었던 청일전쟁 연구에 새로운 청일전쟁상을 제시하고자 ‘청일전쟁의 사회사’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책에서 다룬 주제는 내셔널리즘, 전쟁과 지역의 관계, 전쟁에 참여한 민간인(군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그 안에서 전장의 사망 문제로 감염병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최신 청일전쟁 연구를 바탕으로 청일전쟁에서 역병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역병과의 싸움: 청일전쟁과 역병

먼저 일본 측 청일전쟁 사망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표1과 표2는 각각 일본의 청일전쟁 연구에서 자주 참조되는 저서에서 인용한 수치



大谷正·原田敬一 編, 1994, 『日清戦争の社会史: 「文明戦争」と民衆』, フォーラム・A

## 포커스 II

표1 청일전쟁에서 일본 측 전사자 특징

총사망자	전투 중 사상자	전투 중 병사자
13,488	1,594	11,894

출처: 大谷正, 2014, 『日清戦争』, 中央公論新社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표2 청일전쟁에서 일본 측 주요 병사자 수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각기병	말라리아
5,709	1,964	1,493	3,944	665

출처: 山下政三, 1988, 『明治期における脚気の歴史』, 東京大学出版회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이다. 표1은 청일전쟁에서 총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주목할 점은 총사망자 수의 약 90%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표2에 정리하였다. 주요 사인은 콜레라와 이질 등 급성 감염병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특히 청일전쟁의 주요 전장이었던 한반도에서는 이질이 일본군 사이에서 유행하여 1만 1,20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각기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간과할 수 없다. 각기병의 원인은 비타민 B<sub>1</sub> 결핍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타민이 발견되지 않았던 당시 의학계에서 각기병의 원인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군 군의관인 다카키 가네히로(高木兼寛)와 일부 육군 군의관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각기병과 영양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육군 위생부 수뇌부는 각기병의 원인을 세균 때문이라고 고집하였다. 이 때문에 육군에서 군대 식량 개선이 늦어지게 되었고 청일전쟁에서 많은 병

“

청일전쟁에서 일본 측 전사자의 대다수가 병사자였다는 점에서  
청일전쟁을 ‘역병과의 전쟁’이었다고도 평가한다.

”

사들이 각기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청일전쟁에서의 각기병 문제는 그야말로 인재였다. 이처럼 청일전쟁에서 일본 측 전사자의 대다수가 병사자였다는 점에서 청일전쟁을 ‘역병과의 전쟁’이었다고도 평가한다.

### 3. 청일전쟁과 이질

그렇다면 왜 청일전쟁에서는 급성 감염병으로 인한 병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이질을 사례로 소개하겠다. 이질이란 이질균의 감염으로 초래되는 감염병으로, 음식을 매개로 인체에 유입되어 감염된다. 발병하면 고열과 심한 설사, 혈변, 복통을 동반한다.

일본군이 조선으로 출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직면한 문제는 물 부족이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쉽게 깨끗한 물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일본의 가옥에는 반드시 하나의 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조선에 진출한 육군 군의관이나 육군 위생부가 남긴 사료를 보면 조선의 마을이나 도시는 일본에 비해 우물 수가 매우 적어서 급수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다수 보인다. 급수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군은 급수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전투는 여름철에 이루

## 포커스 II



일본군 진군도(1894. 7~10)

출처: 大谷正, 2014, 『日清戦争』, 中央公論新社; 原田敬一, 2008, 『日清戦争』, 吉川弘文館을 기초해 저자 작성

어졌기 때문에 병사들은 갈증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그 결과, 병사들은 눈에 있던 물이나 흙탕물, 오염수 등 비위생적인 물을 섭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군 내부로 이질균이 유입되는 요인이었다. 즉, 일본과 조선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마찰이 이질 유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조선에서 일본군의 생활방식도 이질이 유행하는 요인이 되었다. 일본군 병사의 사료를 보면 조선의 마을과 도시는 매우 불결하다는 내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일본과 다른

문화적 환경에 놓인 일본군 병사는 조선에 대해 멸시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그러한 일본군 병사의 기록을 기초로 청일전쟁을 연구한 현대의 연구자도 조선이 ‘불결’하다는 평가에 의문을 품는 일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청일전쟁에 출정한 육군 군의관 기록에는 일본군 병사와는 다른 견해가 기술되어 있다. 육군 군의관에 따르면 조선의 마을과 도시는 확실히 불결하였지만, 그것이 그 마을이나 도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군 병사들이 조선의 마을이나 도시에 체재하는 동안 마을이나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분노

“

병사들은 눈에 있던 물이나 흙탕물, 오염수 등 비위생적인 물을 섭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군 내부로 이질균이 유입되는 요인이었다.  
즉, 일본과 조선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마찰이  
이질 유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

를 배설하여 오염을 촉진하였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이 배설한 분뇨로 오염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파리가 매우 많이 번식하여 구름처럼 날아다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도 파리가 바로 날아드는 상태였다.

이러한 분뇨 오염과 파리 번식이라는 문제도 이질 유행으로 이어지는 큰 요소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군에서는 급수 문제의 영향으로 이질균이 군대 안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일본군 병사로 인한 분뇨 오염은 이질균을 널리 퍼뜨리는 행위가 되었다. 그리고 이질균이 포함된 분뇨에서 비정상하게 번식한 파리가 접촉하여 이곳저곳으로 날아감으로써 파리가 이질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일본군과 조선의 도시·촌락 환경의 상호 작용으로 청일전쟁에서 이질이 유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 4. 청일전쟁과 콜레라

다음으로 청일전쟁에서 가장 많은 병사자를 초래한 콜레라를 소개한다. 청일전쟁 당시 콜레라는 주로 중국의 랴오둥반도나 타이완에서 유행하였다. 콜레라는 19세기를 상징하는 감염병이다. 여기서 다루는 콜레

“

군대를 파견하는 데 충분한 수량의 화물선을 일본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었던 일본군은 영국 선박회사로부터 많은 화물선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영국으로부터의 화물선 조달이라는 이 대응이 청일전쟁의 전장에 콜레라균을 가져온 큰 요인이 되었다.

”

라는 ‘아시아 콜레라’라고 부르는 부류이다. 원래 인도 갠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는데, 영국의 인도 지배와 국제적인 교역 발달로 인하여 팬데믹에 이르게 된 감염병이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이질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등을 매개로 감염된다. 발병하면 심한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청일전쟁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였을까? 청일전쟁 개전 시점에 동아시아에서 콜레라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일전쟁에서 콜레라가 유행하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군이 조선과 청으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사용한 운송선에 있었다. 이 운송선은 우리가 보통 승선하는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었다. 일본군은 군대를 대량으로 파견해야 하는데 충분한 수의 여객선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화물선을 대신 사용한 것이다. 또한 군대를 파견하는 데 충분한 수량의 화물선을 일본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었던 일본군은 영국 선박회사로부터 많은 화물선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영국으로부터의 화물선 조달이라는 이 대응이 청일전쟁의 전장에 콜레라균을 가져온 큰 요인이 되었다.

영국에서 조달한 화물선의 취항 이력을 보면 대다수가 인도를 경유지로 포함하는 인도항로를 취항하고 있었다. 그러한 화물선은 인도에서 보급을 시행하였는데, 보급하는 것은 승조원의 음식물과 잡화뿐만 아니라 화물선 운항에 필요한 물자도 보급하였다. 그 안에는 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적된 물, 기름, 자갈 등의 중량 화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중량 화물은 전용 탱크에 저장하였는데, 이 중량 화물로 선적된 물에 콜레라균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아시아의 청일전쟁 전장에 콜레라균이 도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적한 물에 포함되어 있던 콜레라균이 외부로 유출되어 일본군 병사를 감염시켰을까? 그것은 일본군 병사가 승선하였을 당시 화물선 내부의 모습과 이용 상황을 보면 분명해진다. 당시의 화물선 내부는 적은 인원수용 공간에 수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무리하게 집어넣었다. 이로 인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환기와 청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렬한 더위와 악취가 일본군 병사들을 덮쳤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스트레스 등과 맞물려서 갈증을 호소하였다. 여기에 일본군과 콜레라균이 연결되는 요인이 있었다. 원래 화물선은 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상정하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였다. 일본군은 이러한 화물선을 이용하여 파병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운송 중에 일본군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를 저장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준비된 음용수의 저장 탱크로는 군대에 필요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군은 선체의 균형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적한 물을 저장하는 탱크에도 음용수를 넣기로 하였다. 전시 중이라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 탱크를 청소하

지 않고 그대로 음용수를 저장하였기 때문에 일본군 병사들은 음용수를 매개로 콜레라균을 섭취하였다. 또한 병사들은 악취와 열기로 열악한 환경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단으로 탱크에 있는 물을 마시는 일도 있었다. 물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가 청일전쟁의 콜레라 유행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청일전쟁에서 콜레라의 최초 발병지를 조사해 보면 모두 일본군 화물선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처럼 일본군 화물선에 콜레라균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요 전장이던 조선에서 유행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에서는 전혀 유행하지 않았고,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에서만 유행하였다. 이는 일본군의 수송력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청일전쟁 전반이었던 조선에서의 전투 당시에는 일본군의 수송력이 매우 약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여러 물자 수송이 지체되었고 전장에서 폐해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청일전쟁 후반에 청으로 파견된 부대에서는 수송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부대에 추가하여 다수의 수송 인원과 말을 화물선에 실었다. 이로 인하여 과적재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열기와 악취로 인한 열악한 선박 내 환경과 음용수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5. 땀을 대신하여

이상 이 글에서는 일본 근대사 연구의 최신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측 관점에서 청일전쟁에서의 역병 문제를 소개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역병 문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였는데, 특히 물 문제가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게 청일전쟁은 물과의 전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역병에 주목함으로써 일본군이 분뇨로 오염을 시키면서 환경에 가한 압박과 가해적 측면도 부각시켰다. 전쟁에서의 다양한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전쟁이 전장이 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역병을 사례로 이번에 소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일관적으로 일본 측 시각에서 청일전쟁의 역병에 관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역병 문제의 전모를 그려내려면 일본 측 시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한국과 중국 측 분석도 필요하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의 마찰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청일전쟁에 대한 국제 협력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동아시아의 많은 분들과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동아시아의 친선에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토 마사키(加藤眞生, Kato Masaki)**

아이치교육대학 교육학부 인문사회과학계 조교(助教)

나고야대학 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문 분야는 일본 근현대사, 특히 의료사다. 군대와 의료·감염병을 주제로 근대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과 문화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 갑오년의 전쟁과 공동의 역사

손장훈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

## 1. 청일전쟁과 동북아시아 삼국

1894년(갑오년)에 벌어진 청일전쟁은 공식적으로는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한중일 동북아시아 삼국이 모두 관여한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

1894년 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자 조선 정부는 그 진압을 위해 청에 출병을 요청했다. 청이 이에 응하자 <텐진조약(天津條約)>을 구실로 일본군이 동시 출병했다. 청의 리홍장(李鴻章)은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되는 대로 양국 군대가 철병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은 조선의 시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병력을 그대로 진주시켰고 1894년 7월 25일 일본 함대가 경기도 풍도에서 청 함대를 선제 공격하며 양국 간 전쟁의 막이 올랐다. 이후 전쟁은 한반도, 만주, 랴오둥반도와

“

1894년(갑오년)에 벌어진 청일전쟁은 그 명칭과는 다르게  
동북아시아 삼국이 모두 관여한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

”

산둥반도까지 그 무대가 확장되며 1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청일전쟁은 중국의 패배로 끝났고, 그로 인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중화질서가 붕괴했다. 반대로,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무력을 앞세운 제국주의정책을 추진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까지 이어졌다. 한국에게 청일전쟁은 인접국 간 힘의 균형을 이용해 근대화와 자주독립을 추구하려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한 지점이었다.

청일전쟁은 동북아시아 삼국에게 모두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근대사의 기억에서 한중일 모두 감히 꺼내어 말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중국에게는 치욕적인 패배였고, 한국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며, 일본에게는 군국주의의 원점에 위치해 있다.

세 나라 중 중국은 청일전쟁을 기념하는 대규모 박물관을 세웠다.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의 류궁다오(劉公島)에 위치한 중국갑오전쟁박물관(中國甲午戰爭博物館)이 그것이다. 일본도 청일전쟁을 전문적으로 다룬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1937년 6월 중일전쟁 발발 직전 이미 중국에 한 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음을 홍보하려는 의도에서였는지 청일전쟁 강화회의가 열렸던 춘판로(春帆樓) 부근에 일청강화기념관을 세웠다. 이 기념관은 당시 회담장의 집기, 그리고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글귀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일청강화기념관의 규모는 류궁다오의 박물관에 비견할 바가 아니다. 일본 쪽 기념관은 청일전쟁의 결말이라는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으며 규모도 류궁다오의 박물관보다 작다. 청일전쟁에

## 체험! 역사현장

관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자 사실상 유일한 박물관인 중국 갑오전쟁박물관은 무엇을 전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 2. 류궁다오에서 북양함대의 패배

청은 1888년 북양해군을 창설하고 그 본부를 웨이하이웨이(威海衛, 현 웨이하이시)에 두었다. 청은 유럽, 특히 독일의 군함과 대포를 사들여 북양해군의 주력함대를 구성했는데, 그 군비의 규모는 당시 아시아 1위, 세계 4위였다. 북양함대는 정원함과 진원함 등 7,000톤급 군함 2척(선원은 각



바다 너머로 보이는 류궁다오

필자 촬영. 이하 이 글에 있는 사진은 모두 필자가 촬영

“

청일전쟁 당시 라오둥반도 방어선이 무너지자 청의 패배를 막아줄  
마지막 보루는 류궁다오에 주둔한 북양함대뿐이었다.

”

각 330명), 경원함 등 2,000톤급 군함 6척, 초용함 등 1,000톤급 군함 4척, 1,000톤 미만의 군함 9척 등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당시 청 대양해군의 미래였다.

청일전쟁 당시 뤼순(旅順), 다롄(大連)의 포대를 포함해 라오둥반도 방어선 전체가 무너지자 수도 베이징을 지킬 수 있는 건 류궁다오에 주둔한 북양함대뿐이었다. 류궁다오는 산둥반도의 웨이하이만에 위치한 섬으로, 이곳에는 북양함대가 그리고 육지에는 포대가 배치되어 강력한 방어진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1895년 1월 20일부터 산둥반도 동쪽에 상륙하여 육상 포대부터 공격을 시작했는데, 산둥성에 주둔한 군대의 지원을 받지 못한 포대들이 순식간에 함락되고 곧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가 류궁다오 앞 바다에 출현하면서 섬에 주둔한 북양함대는 앞뒤로 포위당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청군은 섬 옆으로 설치된 기뢰와 섬 뒤에 배치된 북양함대 함선,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정원함과 진원함의 화력에 기대어 한동안 수비태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1895년 2월 5일 일본군 연합함대가 기뢰 수역의 빈틈에 어뢰정단을 투입해 돌파하였고 북양함대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로인 정원함을 포함해 청 함선을 격침시켰다. 이어 일본 육군이 점령한 육상 포대에서 본격적인 포격에 나섰다. 위기에 처한 북양함대에서 제독 덩루창(丁汝昌)을 포함한 지휘부가 잇달아 자결하였고 결국 2월 12일 북양함대의 항

“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항일과 관련된  
박물관을 곳곳에 세우고 역사교육을 시작했다.  
중국갑오전쟁박물관도 그중 하나다.

”

북 서한이 일본 연합함대 측에 전달되어 2월 15일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이어 함대의 잔존 함선과 장비가 모두 일본 측으로 인계되면서 중국의 첫 대양해군 북양함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3. 중국갑오전쟁박물관

류궁다오에 위치한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은 북양해군 제독서(提督署) 유적 위에 세워져 있는데, 앞서 일본군에게 처절하게 유린되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곳이 맞다.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패배와 치욕의 역사를 상당히 대규모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박물관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중국 정부는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항일전쟁과 관련된 지방 곳곳에 박물관을 세우고 역사교육을 시작했다. 베이징 교외 루거우차오(盧溝橋)의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난징의 난징대학살박물관 등과 함께 중국갑오전쟁박물관도 이 당시에 설립되었다. 중국의 역사박물관은 제국주의 침략, 특히 일본의 침략과 항일투쟁에 관련된 사건을 주제로 한 항일박물관 계열, 중국공산당의 투쟁과 승리를 중심으로 한 혁명박물관 계열,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 역사박물관 계열로 구분하는데,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은 이 중 항일박물관에 해당한다.

## 체험! 역사현장

사실 중국 정부가 류궁다오의 청일전쟁 유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앞선 1977년으로, 이때 북양해군 제독서를 산둥성의 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하였다. 그후 1985년 3월 21일 제독서 문물관리소가 박물관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국무원은 이를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1992년 4월 25일 제독서 문물관리소가 중국갑오전쟁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2009년에 신관이 증축되어 진열관으로 명명되었다.

이 박물관은 북양해군과 갑오전쟁(청일전쟁)을 중심 주제로 하여 개관 당시 약 1,500건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후 상당히 많은 자료가 추가로 수집되었다. 당시 주력군함 제원함의 부품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명칭은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이 1994년 7월 중일갑오전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휘호로 써서 선물한 것으로, 이때 전국 10대 우수사회교육기지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 4. 중국갑오전쟁박물관 전시 내용

박물관은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따라 후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 입구에는 뜻밖의 재앙으로 나라가 죽었다는 의미의 ‘국상(國殤)’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박물관 설명에 의하면 일본은 갑오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오랫동안 전쟁을 획책했고, 그 목표는 조선과 중국이었다.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71년 이와쿠라(岩倉)사절단 파견, 1873년의 정한론(征韓論)이 나열되어 있고 일본이 이때부터 중국 대륙 전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서술하며 이를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또한 김옥균의 사진과 함께 1884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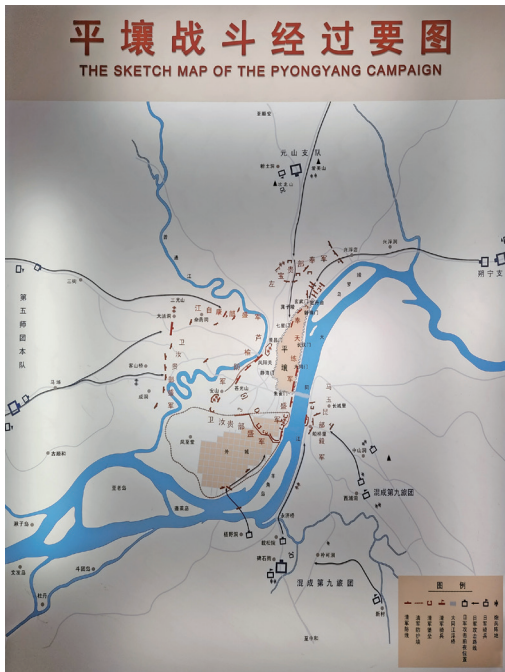


중국갑오전쟁박물관 전시실 입구

갑신정변과 이에 뒤이은 <텐진조약>에서 청과 일본이 조선에 출병하는 경우 서로 이를 알린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박물관은 시기와 지역을 따라 전시물을 배치해 놓았는데, 우선 청일전쟁의 초반부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양대 전투를 보여준다. 특히 평양전투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평양전투에서 당시 총병(總兵) 쥐바오꾸이(左寶貴) 지휘하의 청군은 평양 북쪽 모란봉에서 대패했다. 일본군의 공격으로 2,000여 명이 죽고 3,0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청군 측 지휘관도 전사했다는 설명과 함께 평양전투에서 고전하는 청군 병사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양대 전투 중 다른 하나는 9월 17일 압록강 입구에서 벌어진 황해해전인데, 이 해전에서 전사한 치원함 함장 덩스창(鄧世昌)의 시가 걸

## 체험! 역사현장



평양전투 지도



일본군에 의한 뤼순대학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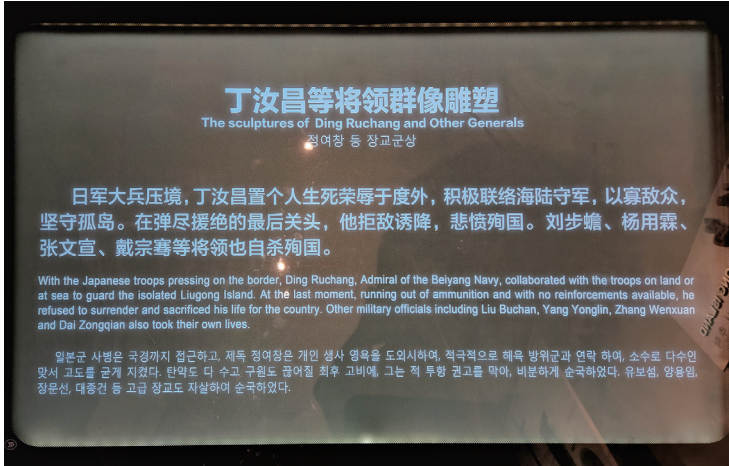
려 있다.

황해해전 후 압록강의 제1군과 뤼순기지를 점령한 제2군이 베이징, 텐진을 위협하며 전쟁은 그 무대를 중국 본토로 옮기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박물관의 뤼순대학살 전시가 눈에 띈다. 뤼순에서의 전투 역시 상세한 전투 지형도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으나, 그보다 시선이 머물렀던 건 일본군이 저지른 2만 명 규모의 중국 민간인 학살 내용이다. 사진과 모형으로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상이 시각적으로 생생히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후일 삼광(三光)작전, 난징대학살로 이어지는 일본군의 잔인한 전쟁범죄를 예고하는 서막이나 마찬가지였다.

청일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를 결정지었던 류궁다오에서의 전투에 대해 박물관은 이를 ‘결전’으로 묘사하면서 패배 이후 자결한 청군 지휘관들의 죽음을 ‘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물관 측 설명에 따르면 류궁다오에서 청의 해군 3,097명, 육군 2,040명, 총 5,137명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고 주력 군함이 나포되며 북양해군은 완전히 궤멸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패배로 인하여 청 정부는 화해를 구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리홍장은 일본과의 굴욕적인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체결로 거액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고 타이완 등의 영토를 떼어주며 통상을 위해 항구를 개방했다”고 한다.

전시실 끝부분에는 이 <시모노세키조약>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청과 일본 양측 협상 대표 4명과 회담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고, 조약으로 할양된 지역과 통상항구가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박물관 관계자는 관람자들에게 청일전쟁의 의미를 “갑오전쟁은 심각한 좌절로 중국을 전례 없는 망국의 위기로 몰아갔으나 동시에 패전의 교훈이 잠자고 있던 중국인들을 깨워 수많은 애국혁명지사들을 항쟁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 체험! 역사현장



류궁다오전투에서 장교들의 자살을 '순국'으로 표현한 설명문



<시모노세키조약>을 재현한 모형

고 이야기한다.

## 5. '보여준 청일전쟁'과 '보고 싶은 청일전쟁'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은 청일전쟁의 패배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의 서태후는 별장인 이화원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소모했고, 이 때문에 리홍장의 북양해군은 창설 이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전쟁이 임박했을 무렵에는 7만 톤의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갑오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전한 것이며 이는 낙후되면 당한다는 진리를 입증했다. 현대 중국의 안전 또한 강력한 해상방위력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해상전력을 충실히 구축하여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은 출구 벽면에 현대 중국 해군의 사진을 전시하여 해양강국 건설을 부르짖고 있다. 역사를 현안과 연결시켜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실제로 청일전쟁은 중국 측이 패배한 전쟁임에도 애국주의를 위해 아낌없이 동원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고조되었던 2012년 7월, 중국은 <1894 갑오대해전>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894년 9월 17일 벌어진 황해해전에서 치원함 함장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덩스창이다. 어떻게 패전이 애국주의에 봉사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중국의 애국주의는 승리담론과 패배담론으로 나누어진다. 아편전쟁 이후 중일전쟁까지의 역사는 불평등조약으로 표상되는 수치의 역사, 이후 국공내전과 신중국 건국까지를 이 수

## 체험! 역사현장



중국갑오전쟁박물관 출구에 전시된 중국 해군의 굴기(崛起)를 선전하는 사진

치를 씻어낸 승리의 역사다. 이것이 중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갑오전쟁이고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은 그 집대성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에는 일청강화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 동북아 삼국 중 청일전쟁을 심도 있게 다룬 박물관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그것은 아마도 청일전쟁을 그 명칭대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 간주하면서 한국을 타자화하는 시선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강하게 스스로를 이 전쟁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이제 그 시선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1894년 전쟁의 당사자로 한국을 참가시켜 ‘청일전쟁’을 대신하는 새로운 사건명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연구 동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설

“

한중일 동북아 삼국 중 청일전쟁을 심도 있게 다룬  
박물관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를 이 전쟁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

득력을 지니고 있다. 당시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일·청·조’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동학농민군을 ‘적’으로, 이들과의 전투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점령지 인민 처분령>은 군용전선 및 군수물자를 파괴한 동학농민군 탄압 경험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1894년 전쟁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한국을 전쟁 당사자로서 규정하고, 적합한 사건명을 만들고, 이를 중국, 일본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올해 5월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산둥대학이 1894년 전쟁에 관한 협력연구를 시작한 것은 이를 위한 작은 한걸음이다.



**손장훈(孫章勳, Sohn, Jang-hun)**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중국근현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부 전공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사이다.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전쟁을 포함하여 현대 한중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0호 2024 가을

발행일 2024년 9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차재복  
편집위원 박한민, 이동욱, 이유표, 전영욱, 조윤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39  
팩스 02)2012-6154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http://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품

ISSN 2950-9696